

第262回國會
(定期會)

環境勞動委員會會議錄

第 9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11月16日(木)

場 所 環境勞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7년도 예산안
 - 가. 노동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審査된案件

1. 2007년도 예산안 1
 - 가. 노동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 가. 고용보험기금
 -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50분 개의)

○위원장 **홍준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9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서도석**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홍준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환경부 및 노동부 소관의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번 실시한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철저한 조사와 사실확인을

통해서 두 부처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2007년도 예산안

가. 노동부 소관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보험기금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10시52분)

○**위원장 홍준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노동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노동부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노동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정부 측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홍준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2회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부 소관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면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노사관계 합리화를 비전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활성화와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지원,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마련 등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용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사정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의 격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또한 선진적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하여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에 중점 투자하고자 합니다.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부문 등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의 고용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인력수급 전망과 일자리 투자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생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적극 추

진하여 비정규직,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여 고용애로요인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한편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장과 차별시정에 역점을 두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직장복귀 촉진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 전문성 제고와 중층적 노사대화체제 마련, 노사의 자발적 협력 촉진 등을 위한 재정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노사 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편성된 2007년도 노동부 재정 총 규모는 19조 568억 원이며,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은 금년보다 9.8% 증가한 10조 5122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416억 원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금년보다 17.1% 증가하였으며, 각 사업별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총액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8802억 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7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억 원입니다.

한편 내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 총 규모는 18조 1152억 원입니다. 이를 기금별로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 10조 5478억 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6조 5465억 원, 임금채권보장기금 4527억 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287억 원,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395억 원입니다.

노동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도 노동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홍보관리본부장으로 하여금 2007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와 2007년도 노동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참석자

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준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유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은 저희 노동부의 간부진입니다.

김성중 차관입니다.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입니다.

송봉근 노사정책국장입니다.

하갑래 근로기준국장입니다.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입니다.

김현수 고용정책심의관입니다.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입니다.

신영철 직업능력개발심의관입니다.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입니다.

이기권 감사관입니다.

장의성 홍보관리관입니다.

이우룡 재정기획관입니다.

박화진 총무과장입니다.

정철균 국제협력국장은 ILO 이사회 참석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입니다.

박종철 경인지방노동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다음으로 산하단체장입니다.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입니다.

김용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박길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입니다.

박은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입니다.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입니다.

최병훈 산재관리의료원 이사장입니다.

박용용 학교법인 폴리텍대학 이사장입니다.

권재철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입니다.

정병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이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김기영 교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산하단체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설명하시겠습니까?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예.

○위원장 **홍준표** 예, 그러십시오.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2건 있습니다.

하나는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 총괄 그리고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먼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등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자격제도 혁신 그리고 공공훈련 시설·장비 현대화 등입니다.

두 번째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근로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 취약근로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여성과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환경 개선 투자 확대, 중증장애인 고용서비스 강화와 장애인 고용 애로 요인 해소, 그리고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임금채권 보장 등입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의 안전 보장과 재해근로자의 직장 복귀 촉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의 재해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산재근로자 재활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 등입니다.

네 번째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새로운 노사관계 체제에 대비하고 지역노사정협의회, 노사협력 지원 등 다양한 노사 대화 체제 마련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세출 조정을 통해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전년보다 241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내역별로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보다도 임차보증금 등 반환금과 청사매각대금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잡수입은 감소하는 그런 내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전년보다 1374억 원이 증가한 94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그 표를 보시면 일반회계가 8880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20.2% 증가한 것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200억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11억 9000만 원, 에너지특별회계는 576억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도로 노동부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서 25억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밑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가 1732억 원으로 14% 늘어났고 기본경비는 271억 원으로 10.6%, 사업비는 7412억으로서 18%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시면 고용정책사업이 2809억입니다. 금년 대비 58% 늘어났습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이 2590억입니다. 6.7% 늘었습니다. 근로조건보호사업이 91억 6900만 원입니다. 42.8% 늘었고, 고용평등실현사업은 14억 원으로 11.3% 늘었습니다. 노사정책사업은 194억으로 1% 줄었고 국제노동협력사업은 77억 원으로서 11.4%가 줄었습니다. 산업재해예방사업은 576억 원으로 13.7%가 늘었고 노동행정지원사업은 2611억으로 12.4%가 늘었고 내부거래지출은 449억 원으로서 30.8%가 줄어든 내역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정책사업입니다.

국가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부문입니다.

사업개요는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원 등의 인건비로 506억 8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10.1% 늘어난 금액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운영비 등에 2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로 75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고용허가제 운영 등에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에 1526억 7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1009억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고 광역형 및 기업연계형 사업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공모형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것 등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은 347억 원을

반영했는데 금년보다 50억 정도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해외취업 지원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04억 원 정도를 반영했고 자활구인개척 사업은 금년보다 대폭 감액된 1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미취업자와 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부분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표로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신규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서 420억을, 그리고 취약계층 중에서 여성 가정에 대한 것은 17억 원을, 새터민에 대한 직업훈련으로는 33억 원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30억, 그리고 자활 대상자에 대한 훈련으로 84억 원을 계상했고 농어촌의 지역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으로서 농특회계에서 8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직업훈련기관 운영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에 5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개발사업에 10억, 자격검정사업에 504억, 외국인 취업자 관리 사업에 146억, 정보화사업에 27억, 그리고 경상운영비에 327억, 대신 자체수입으로는 700억을 계상해서 그것을 차감하여 515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학교법인 기능대학 운영에는 1255억 원입니다. 인력개발사업에 167억, 시설확충사업에 379억, 전산화에 37억, 경상운영비에 87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208억원을 계상해서 그것을 차감하였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운영입니다. 11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노후 건축물 개수에 8억, 생활관이나 도서관 증축에 54억, 정보화사업에 2억 5000만 원, 교육훈련시설 운영에 6억 3600만원 경상운영비로 179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수입으로 139억 원을 계상해서 차감하였습니다.

자격검정 인프라 확충과 훈련 평가 사업입니다. 국가기술자격검정 인프라 확충에 신규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업체 등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기관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하고 자격검정 등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과 그 과정에 대한 평가 사업으로 8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평등실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남녀고용평등사업에 강조기간 운영, 우수사례 홍보 등을 위해서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지원 예산으로 2억 8000만 원,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1억 8900만 원, 그다음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등 고용평등 지원 사업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정책사업입니다.

노사협력사업은 40억 24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5%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노동단체 지원은 35억 원이고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은 3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서 60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노사문화 구축 사업, 노사협력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금년과 같은 40억을 계상했고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으로서 4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노동교육원 출연 예산으로 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로 13억 7000만 원, 노무관리 진단 등 협력 사업에 8억 5500만 원,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위해서 9억 2000만 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에 55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으로 12억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이를 차감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사업비로는 19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중재, 사전·예방적 조정서비스,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중재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근로조건 보호 사업입니다.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보호하는 3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교육·홍보,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추진단 운영비 등입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비로 38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직무정보 제공 임금직무체계 개선 지원을 위해서 6억 6000만 원,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에 1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사업입니다.

진폐위로금 지급으로 5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과 진폐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51억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진폐예방 경비로는 4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노동협력사업입니다.

ILO, OECD 등 국제 협력사업에 63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는 ILO 의무부담금 52억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재단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책 추진을 위해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행정 지원입니다.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청사신축과 유지·관리를 위해서 3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임차청사를 신·증축하고 매입하는 데 255억 원, 그리고 청사 유지 관리 및 임차료로 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행정 혁신, 행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서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정책에 대한 연구개발과 노동통계 조사 예산으로 28억 4200만 원을 계상했고 노동부 직할로 운영하고 있는 종합노동상담센터 운영비로 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동위원회 운영비로 24억 7900만 원, 노사정위원회 운영비로 27억 원,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운영비로 11억 2900만 원, 그리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관서운영비로 1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내부거래입니다.

일반회계나 각종 예산에서 각종 기금으로의 전출금들입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출되는 금액이 102억 원입니다. 고용보험사업의 관리·운영 비용으로 2억 1000만 원, 그리고 모성 보호를 위한 산전후 휴가급여 명목으로 100억 원이 전출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전출금으로 147억 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200억 원을 전출했고 임채기금으로는 7000만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제주도 이관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인데 노동부의 업무가 일부 제주도로 이관됨에 따른 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정책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5억 9000만 원, 능력개발 사업비가 10억 원, 노사정책 사업비로 2000만 원, 그리고 노동행정 지원 사업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41쪽까지는 이상 보고드린 세출 예산의 세부 내역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2쪽에 금년도 완료 사업과 내년도 신규 사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사업은 노사정위원회가 주관하여서 국제노사정기구총연합회 회의가 금년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었고 국제기구 파견 부문은 내년부터는 일괄해서 중앙인사위원회로 이 사업을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하는 바람에 노동부에서는 빠졌고, 국제교류협력사업은 아태총회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용자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재특회계에서는 전액 감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도록 했습니다.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포상금 등으로 11억 원, 한국고용정보원의 경우에 금년까지는 인력공단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독립하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술자격 인증 시설 확보 20억,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추진단 운영사업에 5억 6000만 원, 노동 분야 통상협상대책추진 사업으로 6억 등입니다.

‘참고2’는 프로그램사업별로 예산과 각종 기금을 함께 묶어서 정리한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별 운용계획, 그리고 세부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소관의 5개 기금의 2007년도 운용규모는 총 18조 1152억 원으로서 금년보다도 6.8%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유자금운용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로만 본다면 총 9조 6156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8.9% 증가한 금액입니다.

기금별로 보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여유자금운용을 제외한 일반지출 규모입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 숫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은 4조 5117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9.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재보험기금은 4조 5434억 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0.0%, 임금채권보장기금은 1963억 원으로서 3.5%,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2517억 원으로서 1.4%,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1121억 원으로서 28.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기금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먼저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온-오프라인 고용정보제공, 청소년에 대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 대한 자체청사 확보, 그다음에 종합직업체험관 건립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과 고용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직근로자의 능력개발 지원과 실직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훈련비용 지원 사업, 그다음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컨소시엄 사업 포함 등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공훈련기관의 노후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자격검정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해서 여성·고령자의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육아휴직급여라든가 산전·후 휴가급여를 증액 계상하였고, 실직여성가장에게 자영업 창업에 필요한 점포지원 사업도 신규로 계상하였고……

○위원장 **홍준표** 본부장, 소리 좀 크게 해요. 줄리잖아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줄리는 목소리로 하지 말고 크게 박력 있게……

○한선교 **위원** 유인물로 하지요.

○위원장 **홍준표** 아니, 그래도 들으시다. 그 사이에 위원님들이 공부할 수도 있고……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끝으로 실업급여 수급인원 증가를 반영해서 실업급여사업은 금년보다도 4.3%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지출계획입니다.

수입은 보험료, 재산수입, 용자금회수 등 총 10조 5478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10.8%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용보험료는 임금 인상 등을 감안해서 금년보다도 4.8%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1조 9000억, 실업급여사업에 2조 2800억 등 4조 5118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조 원의 경우는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고용안정사업입니다.

고용촉진과 고용창출 지원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사업내용만 말씀드리면,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1466억 원, 중장년 훈련수료자 채용 장려금으로 8억 원, 장기실업자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 사업으로 150억 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장애인 고용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역시 신규입니다마는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억 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용자사업으로 18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대제 전환 지원금으로 230억 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으로 384억 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158억 원,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으로 64억 원,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 지원금으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조정과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5만 7000명 정도를 예상하고 375억 원, 전직 지원 장려금은 29억 원, 재고용 장려금은 11억 원,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금은 127억 원을 계상하였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지원사업으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노·경총이 운영하고 있는 노사공동 재취업지원센터 지원사업에 31억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3개소에 69억 원, 건설근로자 취업알선 지원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부분입니다.

종합직업체험관 건립은 내년이 3차연도에 해당되는데 2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비로 2820억 원, 대학 취업지원 기능확충 지원사업으로 157억 원, 실업계고교에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에 신규로 48억 원,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으로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지원 기반의 구축입니다.

고용안정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125억 원, 고용보험시스템 구축에 64억 원, 직업정보제공과 직업지도에 50억 원, 직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에 20억 원, 채용박람회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 고용지원서비스 모니터링 센터 운영에 11억

원, 산업·직업별 고용 구조조사를 위해서 14억 원,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를 위해서 18억 원, 그리고 청년패널 구축을 위해서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사업주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250여만 명을 훈련시킬 것으로 예상해서 3102억 원을 계상하였고, 유급휴가 훈련지원은 111억 원, 훈련시설과 장비자금 대부사업으로 76억 원, 사내 기술자격 검정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억 원, 인적자원 담당자 연수비용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분류한 것입니다.

전직실업자 취업훈련 지원사업으로 1575억 원, 근로자 학자금과 훈련비 대부사업을 위해서 813억 원, 검정수수료와 교재비 등의 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를 위해서 218억 원, 수강지원사업으로 132억 원,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100억 원, 훈련컨소시엄 지원사업으로 861억 원,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핵심 직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서 20개 과정에 169억 원, E-Learning 콘텐츠 개발비용 지원을 위해서 14억 원, 노사공동 훈련 지원 7개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14억 원,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인증과 컨설팅을 위한 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부족 분야 등에 대한 위탁훈련사업입니다.

우선선정 직종훈련을 위해서 15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인력공단의 근로자 평생능력개발 지원을 위해서 398억 원을 계상하였고, 폴리텍대학 위탁훈련 사업비로 118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 위탁훈련사업으로 306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중급기술 인력양성을 위해서 2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업능력개발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고용 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지원을 위해서 97억 원, 지역별 인력과 직업훈련 수요조사를 위해서 6억 원, 노사협력 인적자원 개발조사를 위

해서 5억 원, 민간기능경기대회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국제 성인능력 측정 프로젝트에 신규로 참여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은 6만 명을 정도를 예상하여 37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147억 원, 임금피크제 컨설팅 지원을 위해서 17억 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으로 43억 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신규로 10억 원,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을 위해서 8억 원, 실버취업박람회 지원을 위해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고용촉진과 모성보호 사업입니다.

산전·후 휴가급여 예산은 5만 4000명을 예상해서 1206억 원을 계상하였고, 육아휴직급여는 506억 원,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휴직장려금은 11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19억 원, 직장 보육시설 설치·운영 지원으로 27억 원,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용자사업으로 27억 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으로 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등의 출산 후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서 28억 원을 계상하였고, 실직 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점포 지원을 위해서 80억 원, 여성 고용환경개선 비용 용자사업으로 20억 원, 고용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각각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는 총 91만 3000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2조 3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은 13만 2000명을 예상하고 246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장급여로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보험사업 운영비입니다.

적용·징수 위탁에 따른 운영비 지원으로 5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사업 운영비로, 예컨대 피보험자 관리 사업, 고용안정사업 운영, 능력개발사업 등등 운영비로 30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용보험료 과·오납 반환금으로 466억 원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산재보험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먼저 보험급여는 최근 보험급여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서 금년 대비 11.4%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재근로자 요양·재활서비스를 강화하고 산재보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운용계획안을 마련했고, 그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 예방 역량 제고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 관리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계상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입은 보험료가 4조 3713억 원, 가산금 등, 재산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여유자금 회수금 등 총 6조 5465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는 금년도에 비해서 1.6%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보험료는 금년보다도 8.2%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의 경우에는 보험사업에 3조 8000억 원, 근로복지공단 사업에 2700억 원, 산업안전공단 사업에 2500억 원, 산재예방시설 등 용자 사업에 1283억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2조여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입니다.

먼저, 보험급여와 반환금입니다.

요양급여는 17만 5000명을 예상해서 982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휴업급여는 1조 2269억 원, 장해급여는 1조 1129억 원, 유족급여는 2785억 원, 간병급여는 19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상병보상연금은 1600억, 장의비는 260억, 반환금으로는 747억 원을 예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업입니다.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증진과 산재보험 시설 확충입니다.

직업훈련비용지원 등 재활사업에 431억 원, 복지사업에 76억 원, 산재의료관리원 지원에 258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대폭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대구재활전문병원 건립으로 1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재보험사업의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산재보험 위탁운영 지원을 위해서 1279억 원을 계상했고 적용·징수·보상 등 사업수행 경비로 309억 원, 보험시설 건립을 위해서 103억 원, 복지공단연수원 건립에 15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안전공단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성지원 사업을 위해서,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을 위해서 1095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과 같은 규모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위해서 131억 원, 보건관리 기술지원을 위해서 64억 원, 대행수수료 지원으로 7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의식 교육과 홍보입니다.

안전보건교육과 자료 개발·보급을 위해서 103억 원, 홍보사업에 61억 원, 연구개발에 45억 원, 국제협력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재예방위탁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안전공단 직원 인건비 등 예방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823억 원,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을 위해서 7억 원, 예방시설 건립을 위해서 71억 원,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산재근로자와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용자 업입니다.

산재생활정착금 용자사업으로는 900명에 대해서 90억 원, 대학생 학자금 용자로 45억 원, 자립점포임대 사업으로 90억 원, 시설자금용자로 1050억 원, 교육정보센터 임차를 위해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관리비입니다.

기금관리비에 9억 원 등 총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내년도 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사업주 부담금은 부담금 비율을 금년과 같이 1만분의 4로 유지하고 대신 사업주변제금은 최근의 체당금 지급액 증가와 변제금 회수율 제고 노력을 반영해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당금 지급은 지급률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서 금년 대비 3.6% 증액한 것이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수입은 사업주 부담금 1030억 등 총 4527억 원으로서 금년보다도 17.8% 증가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된 재원인 사업주 부담금은 1%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출은 체당금이 1815억 등 1964억 원을 지출하고 2563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별 계획입니다.

체당금 지급입니다.

도산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을 위해서 18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사유, 사업주 요건, 근로자 요건, 체당금

지급액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31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지급사유, 지원절차, 지원액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특별고용프로그램 사업을 역점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사업주의 고용 애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고용환경개선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늘어난 장애인의 일자리 충원을 위해 맞춤형훈련 등 능력개발을 강화하고 장애인패널 구축, 장애인고용통합 DB시스템 구축 등 기초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말씀드리면, 수입은 사업주 고용부담금 1532억 원 등 총 3287억 원으로 금년 대비 20.3% 증가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다만 주 수입원인 사업주부담금의 경우에는 금년보다도 13.6% 증가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용장려금 1187억 원, 공단출연금 1000억 원 등 2610억 원을 집행하고 여유자금으로 67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먼저 장애인 고용창출과 유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장려금으로 1187억 원, 중증장애인 고용유지비용 지원으로 91억 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에 100억 원, 고용관리비용 지원으로 17억 원, 용자사업으로 1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알선사업입니다.

운영에 6억 원,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에 1100명을 취업알선 사업에 19억 원, 직업능력평가센터 계상해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는 직업능력개발센터 운영을 위해서 5개교에 86억 원, 민간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28억 원, 공공직업훈련기관과 특수학교훈련 지원을 위해서 4억 원, 개별적 능력개발훈련 지원을 위해서 1억 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재활사업의 경우에는 직업상담 및 평가 등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장적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고용사업, 취업알선·취업 후 적응지도, 실시기관 지원, 기타 직업재활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

서 총 1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운영 지원을 위해서 조사·연구사업, 고용정보관리사업, 홍보·대외협력사업,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를 합해서 4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권기금 지원사업입니다.

복권기금은 182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82억 원을 쓰고 장애인영업장소 전대사업에 10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진흥기금입니다.

내년도 이 기금운용계획의 특징은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체불생계비대부사업의 융자 규모는 금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신용보증 대위변제사업은 대위변제 발생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실업대책사업은 연차별 사업 축소 계획에 따라서 지원 규모를 대폭 감액했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한 것 등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타계정과 복권기금전입금 283억 원, 이자수입 128억 원 등 2395억 원으로서 금년 대비 20.9%가 감소한 것입니다.

지출은 중소기업사업, 신용보증사업, 실업대책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1500억 원을 지출하고 895억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부 사업으로 340억 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를 위해서 240억 원,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132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근로자복지 지원입니다.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을 위해서 52억 원, 민간복지시설 이용지원 사업에 18억 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운영에 12억 원, 문화예술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5억 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용보증사업은 근로자신용보증지원 대위변제사업에 130억 원, 신용보증지원 사업운영 지원을 위해서 33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실업대책사업입니다.

장기실업자에 대한 창업지원 사업으로 15억 원, 실직여성가장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별로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59쪽 이하는 이상 보고드릴 기금운용계획의 세

부 내역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진훈**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 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위원님들한테 이미 배부되었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25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184억 8700만 원보다 241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용지원센터 및 청사임차보증금 반환 등 기타 경상이전수입의 증가와 그동안 국유재산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가 특별회계의 폐지로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입니다.

근로자복지매장 보조금 회수금, 임대아파트 보조금 회수금 등의 경우 아직도 미수납 상태에 있는데 수납이 가능한 정도를 고려해서 적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신규사업은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한국고용정보원 인건비, 국가기술자격검정 인증시설 확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 노동분야 통상협상대책 추진 등으로 신규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118억 4600만 원입니다.

민간고용서비스활성화사업은 불법 직업소개 행위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직업소개 사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건전한 고용질서의 유지와 직업소개 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소개사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는 직업훈련부정행위 신고포상금 등 총 8개가 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은 사업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동시에 취업취

약계층 등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 진전에 따른 사회적 서비스 수요의 급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부족하게 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 중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은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공모형의 경우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와의 편성 협의 시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의 공모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계의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7년도 신규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예산액은 전년도 425억 4800만 원보다 5억 900만 원이 감소된 420억 3900만 원입니다.

취업훈련 실적을 보면 훈련 실시인원은 매년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등 양적인 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중도탈락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고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훈련의 성과측정에 있어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후 근속기간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조사분석과 아울러 직업성을 제고하는 직업훈련방안의 수립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기능대학은 2005년부터 대학 공학관, 대학 기숙사 등 시설투자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정부의 경기진작과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한편 조기에 학교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국가재원 조달에 유용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향후 BTL투자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정부지급금 소요액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하는 운영비 등이 재정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한편, 경직적인 시설운영비 등이 국회에서 확정하는 예산을 강제하는 점에

서, 이와 같은 BTL투자계획은 사전에 국회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사업입니다.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사업은 전년도 대비 236.9%가 증가된 23억 3500만 원입니다. 체불임금 청산지원팀운영 사업을 보면 청산지원팀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가 62.7%로 일반 근로감독과에 비하여 높으나 전체 사건 수에 비하면 접수 사건 및 처리건수가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퇴직연금컨설팅사업은 전년도보다 6.5%가 감소한 11억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수에 비하여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의 수가 매우 적고, 개별 사업장별로 컨설팅을 계속할 경우 이 예산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표준모델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별 사업장이 구체적 사정에 맞는 자료를 입력하면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사관계발전 지원사업은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및 기업·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노사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도 재정지원규모는 전년도와 같은 40억원입니다.

예산의 편제와 관련하여 이 사업을 실제 집행하는 한국노동교육원의 출연금 사업 예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 예산으로 하여 한국노동교육원에 출연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운영의 방식은 한국노동교육원이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본래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지만 출연기관을 필요 이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재정지원협정 체결 시 지원업체에 대한 자부담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하여 자기 행사로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며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성보호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지급소요액은 1205억 원으로 추정하여 50%인 605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예산조정 과정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일

반회계 재원분담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 기금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사회분담화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의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산을 일괄하여 지원하고 지역이 자체 우선순위에 따라 원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그간 각 중앙부처가 7개의 회계를 통해 분산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 관련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한 것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도 이관 사업 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25억 2200만 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노동부소관의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및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있습니다.

2007회계연도 노동부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8조 1152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32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적립금·여유자금운용(예탁금)을 제외한 순지출 규모는 9조 615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84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보험기금 계획안입니다.

고용보험의 적립금 현황을 보면, 기금 전체 적립금 규모 면에서 2005년 9조 1197억 원, 2006년 9조 1468억 원, 2007년 8조 7897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적립금 배수에 있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의 적립금 현황을 보면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계정의 경우 규모나 배수에 있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적립금의 적정성 여부 및 기금증식을 위한 방안 등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지원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일반회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자격검정문제가 기술변화·법령개정 등에 따른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문제은행 전면 정비, 자격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 검정장비보강사업에 소용

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한하여 실시하는 한시적인 사업으로 기금지출 계획안에는 총 96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유능한 인력을 배출하여 산업체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의 자기능력개발, 신지식 습득기회 부여 등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한다는 측면은 있으나 일반회계에서 수지차보전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실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사업으로 실시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회계에 반영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직무능력향상훈련 강화사업은 공공훈련인프라 혁신과 관련하여 종전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통합하고 양성훈련 규모를 연차별로 축소하고 향상훈련 규모를 확대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중기계획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376억 원씩 총 1128억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약 2만 4000점 정도로 교육훈련에 필요한 기준장비 대비 29%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장비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산출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연차별 교육훈련인원(향상훈련)이 과다하게 책정된 면이 있어 실제 집행에 있어 괴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신기술장비확충사업 중 신기술연수센터건립사업의 경우 2006년 지출계획안에는 소규모 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매년 1개소씩 건립하기로 하였으나, 2007년 계획안에는 당초 투자목적과는 달리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신규로 2개소를 추가로 확충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비 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의 사유, 구체적인 사업 변경내용 및 그 변경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된 사업은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사업, 장애인고용사업장 고용컨설팅지원사업,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융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총 200억 원입니다.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사업을 이관한 사유는 장애인고용기금의 수지악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사업의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국가전체의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재정의 통합적 관리운영 관점에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 중 고용보험기금의 성격과 부합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업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특정기금 수지의 어려움만을 이유로 설치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고 기금계획안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자칫 법률사항이 정부가 수립하는 기금계획안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사업의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사업전환은 신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금사업을 이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업전환·실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근거규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동력산업 중급기술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한국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 분야의 부족한 중간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폴리텍대, 산업별 교육훈련혁신센터, 우수실업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장동력특성화와 관련하여 대학별 지원실적을 보면 2006년도의 경우 기능대학에 78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1억 89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중 출연기관인 기능대학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서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출연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 지원은 가능한 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 등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가 지역사회 고용안정을 위한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센터를 우선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연도별 매입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04~2008년까지 총 8636억 원을 투입해서 72개소의 고용지원센터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소요재원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업의 수지 차가 2006년 및 2007년에 각각 1032억원, 3978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동안 청사매입사업의 결과가 그동안 계약이 이루어진 후 예산이 집행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되지만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계획안입니다.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에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말 기준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으로 적립될 금액은 법정책임준비금보다 3조 572억 원이 부족한 2조 2329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확보율은 2004년도 54.5%, 2005년도 40.8%, 2006년도 41.4%, 2007년도 42.2%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적용누락사업장의 가입과 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수입 확대와 아울러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지출억제 노력,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개선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임금채권보장기금 계획안입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4.7% 감소한 30억 5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하여 체불임금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들이 형식적으로 조사를 한 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사건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계획안입니다.

직업재활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 사업주부담금의 9분의 2에 해당하는 기금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직업재활사업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7년도 예산액은 163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원사업은 기금수지의 연례적인 적자로 인해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는 등 기금재정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보건복지부와 공단 간의 사업의 중복성, 기금사업으로서의 적정성, 그리고 관리운영상의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금과 일반회계 간의 역할분담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계획안입니다.

근로자장학사업은 전년도보다 8.0%가 늘어난 131억 52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근로자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소득근로자 및 그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중 수급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홍준표** 전문위원 그 짧은 시간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동부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각 1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이강래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이 한일의원연맹 참석차 갔기 때문에 질의 가능한 위원님들은 열두 분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시간이 허용되는 대로 질의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한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반·특별회계 예산, 기금 운용에 있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에서 고용정책 부문 58.1% 증가한 2803억 원에 대한 것입니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 고용 창출에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저 뿐 아니고 존경하는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던바, 2개월 연수에 월 30만 원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체험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들의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총 347억 원 전액 삭감을 제의합니다.

또 노사정책 부문 1.1% 감소한 194억 원, 이것

은 노사정위원장께서 계시고 노동부장관께서도 계시는데 노사문화구축사업에서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미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노사정위원회 산하의 지역노사정위원회 71개 중에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회의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절반이 넘는 37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노사정위원회하고 노동부의 지역노사정협의회 업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복되는 바가 있는데 지역노사정협의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존속이 되어야 하지만 노사정위원회가 법 개정을 통해서 존속하고 더욱 확대 개편된다면 지역노사정협의회의 운영 명목인 4억 80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답변드릴까요?

○**한선교 위원** 이게 중복되는 바가 있고 지역노사정협의회라는 것이 잘 되지도 않고, 지금 지방노동청도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4억 8000만 원,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작은 돈을 우리가 아껴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의 삭감을 예결소위원장님께 먼저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보호 부문입니다.

근로조건 보호 및 홍보사업 중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단 운영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이 신규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침에 따라서 각 부·산하기관에서 시행하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꼭 추진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부 대책에 따라서 상시고용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려면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 정원을 넘기게 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있는 데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진행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추진단 운영 명목으로 신규 배정된 5억 6000만 원은 진행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일단 삭감을 제의하겠습니다.

또 근로감독행정사업을 통해서 근로감독관 사기 진작 명목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도 27억 9000만 원에 대비해서 10억 4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7.5%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들께서 석면철거현장의 근로감독관의 업무 태도 및 현장 방문조사 소홀, 여러 가지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사기 진작 명목으로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해서 이들이 과연 지난날보다 더 열심히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자신의 직무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정신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증액 예산 10억 4000만 원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퇴직연금정착지원제도는 2006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2007년도에 11억 3000만 원, 퇴직연금제는 장관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지난 2006년 9월의 경우에 전월 대비 적립금액 기준이 무려 93.8%, 거의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업장 컨설팅 이런 데에 쓰이는 예산은 금융시장의 영역으로 민간에 맡겨도 얼마든지 이것은 해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홍보가 더욱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총 11억 3000만 원 전액 삭감을 제의드립니다.

노동행정지원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행정혁신사업으로 2007년도에 4억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정부 들어서 혁신사업, 혁신회의 등 혁신 부문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말만 혁신이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행정혁신사업으로 총 4억 1000만 원 배정된 것, 전액 삭감을 제의드립니다.

노사정위원회운영사업으로 26억 6000만 원, 또 노사정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5000만 원 편성, 이것은 일단 법안도 올라와 있고 노사정위원회 폐지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산 27억 1000만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기타 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계기 마련을

위한 출연금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고 산하기관은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에 노력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산업인력공단 48억 9000만 원, 기능대학 125억 50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학 11억 1000만 원, 한국노동교육원 7억 4000만 원 삭감, 총 192억 9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출범 초기로서 출연금 전액이 인건비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삭감치 않고 고용보험기금 출연금에서 10%를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안전공단의 경우에 기금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출연 예산에서 1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홍보비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에 대한 의문을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고용정책 부문의 고용안정대책지원사업에 2억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삭감을 요구합니다.

노동부의 2007년 기금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보험기금 지출예산 총 1404억 1000만 원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수입은 03년 이후 06년 6월까지 고용보험료의 누적미수납액이 3976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던 바인데 매년 약 10% 정도의 미수납률이 발생하고 또 체납액만 3911억 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료에 대한 징수율을 20%대로 낮게 잡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국감에서 저희가 질의응답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체납액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한다면 기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수입이 보장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미납액만 보더라도 04년에 30억, 05년에 35억 등 증가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콜금리가 4.5% 정도 되지요. 정도가 아니고 4.5%지요. 이 자수입에서 MMF 이율이 3.55%, 1년 만기 수익증권 5.01%, 2년 만기 수익증권 4.34%, 3년 만기 수익증권 4.64%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최소한 MMF 수익률이 시장금리를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3.55%로 책정되어 있지요?

현재 시장금리는 법인의 경우 4.1~4.2%, 개인은 4.3~4.5%입니다. MMF 이율을 0.5%만 올려도 430억 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수입을 예상할 것이 아니고 수익률이라든지 연체료, 아직 미수납된 것을 적극적으로 수납하는 노력을 보인다면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말씀하실 것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께서 하신 포괄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을 피하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명심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굳이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경우에 연수 참가자의 취업률이 낮아서 동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 성격상 대부분 재학생으로……

○**한선교 위원** 그래서 2개월인데,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직업의식이라든지 경험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의 실적으로 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장관님, 3분 남았으니까 제가 하고 마지막에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 2910억 원 중에서 휴업수당지원금 288억, 무급휴직지원금 6000만 원, 인력재배치지원금 2억 7000만 원, 전액 291억 3000만 원 삭감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로서 고용안정지원금이 외환위기 당시 전 산업 통틀어서 인당 12만 4000원이었는데 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4만 1000원으로 거의 70% 정도 삭감되어서 인당 지원금액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지난 국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고용유지훈련, 유급휴직지원, 교대제 전환지원, 중장년훈련수료자 채용장려,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 등의 사업은 인정하고 기업의 몫 또는 무급·휴업 등 현금지원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고용촉진을 위해서 04년 이후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근로시간단축지원, 고용환경개선지원, 전문인력활용장려, 신규업종진출지원금 등 총 1240억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인력 순 증감은 03년도 마이너스 4213명, 04년도 마이너스 7668명, 05년도 마이너스 5502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지원금 2910억 원 중에서 중소기업고용창출 관련 예산 중 근로시간단축지원 158억, 전문인력활용장려 383억, 신규업종진출지원 25억, 총 566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에 기인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의 사업인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64억 4000만 원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또한 고용정보제공 235억 중 취업체험 및 취업캠프 프로그램 운영 20억 전액 삭감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이 비용을 취업정보 제공 또는 채용박람회 지원 등에, 오히려 더 실질적인 데 투입을 해서 그들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물론 이 예산도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분야를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출연금 10% 삭감, 한국고용정보원 운용예산 27억 중 2억 7000만 원, 고용안정전산망 관리예산 125억 원 중에서 12억 6000만 원 삭감, 총 15억 3000만 원이 되겠지요. 이는 일반회계에서 노동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계기 마련을 위한 출연금 일괄 10% 삭감과 동일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은 사실 참가하는 사람이 재학생이기 때문에 취업률보다는 앞으로의 구직 탐색기간과 첫 직장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해서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가 있고요. 특히 이 제도는 청소년의 학교에서 노동시장 이행 원활화를 핵심적인 수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감안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래 위원** 조성래 위원입니다.

우선 고용지원센터를 매수하는 사업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8636억 원 투입해서 72개소를 사들인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16개소에 201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2007년도에 27개소에 2692억 원 예산을 올려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을 사들이는 방법은 지방청에서 매수 1~4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대체로 돈도 좀 많이 들지만 건물도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돈 많이 주고 큰 건물 사는 것 좋지만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접근성도 좋고 또 예산도 덜 드는 건물이 좋지 않을까, 그런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부에서 매수결정을 하는 과정은 센터 청사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센터청사선정위원회는 주로 노동부와 지방청의 간부로 구성되고 민간 전문가는 딱 한 사람이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몇백억이나 나가는 이런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참여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부동산 컨설팅 전문가를 좀더 참여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고용지원센터의 청사 매입은 우리 노동부의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청사를 매입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건물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자기 건물이 팔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민원도 제공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투명성을 높여서 공정하게 매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투명성을 높이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자는 의미에서 우선 선정위원회부터 외부인사들을 전문가로 모셔서 최소한 동수 이상으로 하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컨설팅 전문회사에 맡기는 문제는 청사 구입이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중

앙에 있는 컨설팅 회사한테 맡겨서 그 회사가 다시금 지방의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이런 것이 나올는지, 청사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중심이 되되 그 지역의 부동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는지 하는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입장을 정리 못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효율성을 따져서 가능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래 위원** 저도 반드시 컨설팅 전문업체에 맡겨 달라는 부탁말씀은 아니고 위원회에 전문가를 조금 더 참여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필히 하겠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서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다음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대체로 기술개발자나 우수기술자, 기능인력자에 대해서 장려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겠다 이런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에 81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가 신청사업주가 급격하게 느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해서 270억 원으로 증액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보다 사업주가 많이 신청해서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을 늘인다고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이 제도를 보고 이렇게 많이 신청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가 채용해 놓고 지원금을 신청한 것인지 그것이 좀 명백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사업평가와 집행 이런 것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효율적인 집행에 관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에 따라서 2004년 10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했는데 제도도입 초년도에는 사업주의 인식부족으로 실적이 미흡했지만 그후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 제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사중손실이나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원방지기간을 두고 있고 효율성 평가를 통해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용안정사업의 효율성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평가 중에 있어서 11월 말까지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자산운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은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고 있는 부분인데, 2005년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되는 평균 금액이 고용보험이 약 9조 원, 산재보험이 2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률이 고용보험기금이 4.16%, 산재보험기금이 4.36%입니다.

그리고 이 보험금을 다루는 민간 전문인력이 현재 두 사람밖에 안 된다고 하고 더더구나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수익률이 높지 않은 것은 자산을 운용하는 전문인력, 그리고 전담부서 이런 부분하고도 다소 관계가 있을 것이다, 큰돈을 만지는 부서, 아니면 전문적인 인력 이런 것들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 그 점 고민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자산운용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서 2005년 3월에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15명 증원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2006년에 전담인력이 2명밖에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운용 규모에 비해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이 미흡한 문제점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2007년에는 자산운용전문가를 추가 확보해서 기존의 경력직공무원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자산운용 전담조직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자산운용 효율화를

위해서는 2006년부터 대체투자수단 발굴 및 운용사 직접판매를 도입하였으며 향후 그 운용 성과를 토대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한편 자산운용의 효율성 및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서 '07년에는 주식투자 확대, 투자기관의 장기화, 신규투자상품 개발 도입 등 자산운용 개선방안을 계속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산재 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들의 폐업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클린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 사업 자체는 산업안전공단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돈을 넣어서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폐업률이 한 6.4%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업체 비율이 10인 미만인 업체가 약 58%, 10인 이상 30인 미만 업체가 33.1%로 결국 30인 이하의 업체가 90%를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장들이 주로 영세사업장이다 보니 그 폐업률이 꼭 높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의 소중한 사업자금을 지원한 후 폐업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부도나 폐업이 예상되는 사업장이 선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매출액이나 채무 상황 등 사업경영 상태를 좀더 치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사전 점검의 방법을 좀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조성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자문을 받는 방안을 포함해서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부터 2005년까지 클린사업장의 부도 폐업률은 6.4%로 제조업 전체의 연평균 폐업률 14.7%보다는 낮은 셈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가 과연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공단에서 사업주나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교육 사업에 2007년도 예산으로 164억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교육 사업을 해서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졌는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산재가 줄어들었는지, 과연 이 홍보·교육의 효과가 어떠한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측정하기도 어렵고 판단하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보면 사내교육이나 이동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컨설팅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어느 방식의 교육이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디에 사업비를 더 투입해야 할는지, 이런 평가의 근거와 통계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평가와 교육평가를 좀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노사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켜서 재해를 예방하고자 말씀하신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안전공단에서는 지금까지 교육이수자 설문조사와 외부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개선해 왔습니다.

재해예방 효과 등 성과에 대해서 금년 9월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사업의 재해예방 효과 등 교육사업성과 평가와 운영 중인 교육과정의 필요성 및 교육만족도 등 교육평가를 보다 체계화하여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이를 토대로 재해예방 효과와 만족도가 높은 교육사업 및 과정을 개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교육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조성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예상 질의를 어디서 구했어요?

예상 질의 딱 구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답변을 적어 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장관님이 업무 전체를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는 기계적인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담당 국장이나 차관을 동원해서 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이 업무 전체를 세부적인 것까지 알 수 없습니다. 생동감 있게…… 적은 것 가지고 장관님 읽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오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회의를 중지하였다가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홍준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입니다.

예산소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삭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뉴스타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자격으로 줍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담당 국장님 나오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입니다.

뉴스타트프로그램은 고령자로 하여금 현장직업 훈련을 하는 데 주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훈련을 하는 데 대한 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으로 하고 새출발지원프로그램 실

시 비용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주에게 훈련생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정진섭 위원 1인당 월 10만 원?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예.

○정진섭 위원 그 1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사업주에게서는 월 10만 원을 주지만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에서 훈련수당을 다시 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주게 됩니다.

○정진섭 위원 예산을 좀 많이 하지 왜 10억밖에 못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에서 현재 집체훈련비 단가 40%하고 숙박비, 그리고 기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여성고용지원사업이라고 새로 23억 잡으신 것 있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예.

○정진섭 위원 그것은 내용이 뭐니까?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여성고용지원이라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23억 잡은 게 있잖아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이것은 여성고용환경개선 용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성 고용과 관련된 수유시설이라든지 착유시설, 화장실 이런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용자를 해 주게 됩니다. 그때 용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여성고용관리와 관련된 환경개선 컨설팅을 위해서 3억을 배정하고 용자사업으로 20억을 배정했습니다.

○정진섭 위원 좀 많이 하지 왜 23억밖에 못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첫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20억으로 먼저 시작을 해 보고 수요가 많게 되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증대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예산 편성된 것을 죽 보면서 새로운 사업이, 또 실업구제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하나하나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봤다는 식으로 예산을 조금씩 갖다 붙이더라고요. 아까 말

했듯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늘 지적하는 얘기이지만 내년도에 고용지원센터 청사는 27개소에 2820억이라는 돈을 갖다 붙이는데, 이 돈이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고용지원센터 청사 구입비를 감안한다면 다른 데 사업비가 적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당장 실업의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만들 수 있고 허다하게 있는데 28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청사 사는 데 투입을 해야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 봐서 청사 구입비에 그런 돈을 쓰더라도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기금은 상당히 많이 적치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아, 돈이 많으셔서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또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청년패널 구축,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이런 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통계청에서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차별성이 있어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입니다.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 조사나 청년패널 구축 조사는 대상자를 일단 뽑아 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매년 어디에 가 있는가를 죽 추적해 가면서 조사해서 그것을 나중에 저희들이 직업지도나 이런 데 활용하는 것이고요, 통계청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추적 조사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이것 고용정보원에서 하는 것인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나는 고용정보원이 워크넷을 잘 하면 좋겠는데 일을 위한 일을 만든다 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저도 여론조사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명분이야 얼마든지 붙일 수 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사 조사가 다른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정보원에서 또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예산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조사해 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기관과의 중복성 같은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장관님, 고용보험이라든가 산재보험에 들고 싶으면 들고 안 들고 싶으면 안 드는 것 아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강제보험이란 말이예요.

강제보험이 국민에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국가가 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낸 보험료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혜택이 되는 일의 사업비에만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원칙이 아닌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 자락 깔기 위해서 지금 원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그런데 계속 표현하시기를 고용보험기금이 워낙 많아서 청사도 많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청사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심스러운 부분, 또 과연 이것을 일반예산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으로 해야 되는지가 의심스러운 부분들에 예산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요.

우선 첫째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에도 했던 사업이긴 하지만 외국인근로자들도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처음에는 당연 가입을 하도록 했는데 작년에 바뀌어 가지고 임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가입자에게 혜택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물론 사업주가 내는 분야도 있지요. 고용안정이나 능력개발은 사업주들만 내지만 그것도 그 사업장

이 내는 것인데, 그런 것들은 마땅치 않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에 하나 있고 금년에 안산에 하나 세우고 내년에……

○**정진섭 위원** 그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하는 것이 옳지 기금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어떤 겁니까? 처음 취업하는 사람들을 채용해 주는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신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일종의 채용비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 취업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 뭘 더 주는 것 아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보험료를 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진섭 위원** 사업주만 내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이 성격이 사업장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봐서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던 근로자들이 실업을 했거나 전업을 하거나 이럴 때 이것을 원활하게 하자고 해서 이 기금을 만든 것이지 고용전반을 다 서포트하자고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때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인 지적도 받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인 고용시장정책을 펴기 위해서 고용보험기금을 적절히 활용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견해가 높아서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법에 의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의 정신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지, 보수적이라고 비판이 나오면 넓게 하고 또 저같이 지적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다시 좁게 집행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보면 자격검정사업은 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만 시험 보는데 돈이 얼마 들었다는 등 전원이 합격한 시험이 몇 개이고, 또 전원이 떨어진 시험이 있고 이런 것을 죽 설명했었는데 하여튼 이래서 정비를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자격검정사업을 새롭

게 개혁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해야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자격검정이 결국 고용과 관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고용과 관련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기금에서 하시면 되지 일반예산이 없어서 고용보험기금에서 할 수 없이 쓴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고용’자만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장애인고용증진사업에 돈을 200억 쓰는 것을 그것이 많다 또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전에 없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를 많이 요구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운영비로서 이번에 한 200억 받게 됐고 또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일부를 받게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일반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것이라도 써야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옳은 것이지 ‘고용’자 들어갔으니까 다 할 수 있다,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 싶은데 안 되어 가지고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법적으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진섭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까 장애인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설치 근거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지 않고, 기금계획안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전환하는 것은 자칫 법률사항이 정부가 수립하는 기금계획안에 종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까 장관님 들으셨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견은 어떠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니까 이제 고용보험기금을 써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금을 주는 쪽에 제약되어서 자율성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섭 위원 이렇게 고용자만 붙으면 고용보험기금에서 다 갖다 쓰시면, 그러면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얼마라도 내놓고 쓰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2억 중에 100억은 뭐에 쓰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어느 것 말씀이지요?

○정진섭 위원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얼마냐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번에 200억……

○정진섭 위원 받게 되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은 아마 운영비로 주로 쓸 것 같은데……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입니다.

원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고용보험기금보다 먼저 설립되었습니다.

○정진섭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에 얼마 전입하느냐고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200억 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200억의 명목이 뭐예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200억이 전입은 되고 있는데 사업 성격으로는 운영비라든지 재활기금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운영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5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102억 170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 가는 것이 102억이고요.

○정진섭 위원 그러니까 고용보험으로 가는 것 중에서 100억은 모성보호에 쓰는 것 아니에요? 진짜로 고용보험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도와주는 것은 2억 1700만 원이에요. 뭘 갖다가 하신 것입니까?

청사를 그렇게 많이 사들이면 반환금이 얼마가 돌아온다고 했지요? 지금 청사 쓰고 있는 것, 임대료 반환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내년 세입 예산에 얼마 잡혀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344억입니다.

○정진섭 위원 청사를 그렇게 기금에서 사서 삼백사십몇억이라는 돈이 안 쓰게 되고 남았는데 그것조차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못 써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전입해 주라고 했는데 예산처에서 해 주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가장 실세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회수한 돈 삼백몇억도 거기에 도로 못 놓는다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당의 입장에서 노동부 예산에 대한 조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소위 직전까지 자료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흥준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률 위원 산재보험 재정수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계속 급격히 악화되는 심각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정감사 때하고 그전에 결산심사 때도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2007년도 책임준비금 확보율이 42.2%로 역시 계속 심각한 상태인데 산재보험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험료를 인상으로 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적용 누락 사업장의 가입 그리고 보험료 수납률 제고 이런 수입기반 확대, 또 지출 억제 노력, 책임준비금 산정기준 개선 이런 개선안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산재보험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와 결산심사 때도 거듭 본위원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니까 산재보험료 수납 실적이 낮은 이유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종률 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자꾸 책임준비금 확보율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이번 기회에, 내년 예산 심의하면서 보니까 책임준비금 확보율이 올해 40.8%에서 내년에도 여전히 42.2%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논의하는 기회에 이런 산재보험제도 재정 수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제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말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2000년도 7월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가지고 실제로 보험급여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연금 수급자도 2006년 6월 말경에 3만 9000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 또 보험 급여가 최근 5년간 연평균 21.6% 상승했습니다.

○김종률 위원 장관님, 수급자가 증가한 것은 그만큼 예산이 나갈 데가 많은 요인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해 준 보험료 수납률 제고 이런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수입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마는 궁극적으로 42%에밖에 이르지 않는 책임준비금 확보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아까 법 개정을 말씀하셨거든요. 법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시려는 것인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법 개정 전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현행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단순하게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바로 보험료를 인상으로 이어져 가지고 기업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요. 법 개정 방향에 그런 점도 고려하고 있는 것인지 얘기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노동보험심의관 조정호 노동보험심의관 조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되면 요율 인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율 관리 쪽에서 지출 억제도 강화해 나가면서 법 개정 방향은 현재 노사정위원회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노

사정 간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사안 중에 하나로 요양 관리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하자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지출 억제 노력은 법 개정과 관계 없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노동보험심의관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요양 관리 내용이라는 것이 무슨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법 개정을 말씀하시기에 물었는데 법을 어떤 방향으로 고치건 간에 자칫 또 이 문제를 그냥 근본적 대책 없이 놔두게 되면 그야말로 보험료율이 그냥 인상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노동보험심의관 조정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은 안이하고 쉬운 방법이고 지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기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용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아무 것도 내놓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입을 확대해야 되고 또 지출은 억제해야 되는데,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요율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 앞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양관리 같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고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양 측면을 다 고려하면서 기금의 안정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법 개정을 말씀하셨는데 법 개정 작업은 사실 수입 기반 확대나 지출 억제 노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는 거예요.

수입 기반 확대와 지출 억제 노력은 법 개정하고 관계 없이 평소에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법 개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데 그 내용에도 역시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나 근본적인 대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40%밖에 안 되는 책임준비금 확보율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법을 개정해야만 요율도 고칠 수가 있고 또 책임준비금의 산정 기준도 변경할 수가 있고 또 현재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확대하려면 제도를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근본적으로 고치겠다는 취지지요.

○김종률 위원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것은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물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보니까 특히 올해 9월 20일에 사회적 기업 육성 전략에서 2010년까지 사회적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유형 중에 기업연계형 사업에 대해서 보면 9월 현재 사회적 일자리 참여 선정 단체 450개 중에서 기업연계형은 단 7개에 불과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큰 폭으로 늘어난 기업연계형 사업 예산 집행을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저희들이 작년에는 16개 기관이 신청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7개 기관만 선정했는데 참가 기업들이 기업연계형으로 전환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고 또 기업도 사회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에 360억을 들여서 3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 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많이……

○김종률 위원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가 정부 지원금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는 수익형 모델이 육성되어야 되고 이에 대한 중기계획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동부 차원에서 마련된 중기계획이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기업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광역형 또는 기업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법을 통과시

키기 위해서……

○**김종률 위원** 좋습니다.

제가 바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법안은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인데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이 꼭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지원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는 처음에 금년 상반기에 법을 통과시켜서 하반기에라도 실시하고 늦어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이 법의 시행을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밖에 없어서 예산은 하반기에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또 내용 중의 하나를 들여다보고 지적을 하면 기존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나 조직이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김종률 위원**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과 이런 사회적기업 지원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전부 다 사회적기업으로 넘어온다면 중복이 되겠지만 별도의……

○**김종률 위원** 다르다면 중복 지적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다릅니다.

○**김종률 위원** 타 부처 공모형 사업을 도입해서 587억 5800만 원 예산 순증을 했는데 공모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 중복 투자 우려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보다는 혹시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와 편성 협의 시에 미처 반영시키지 못한 사업을 공모형을 통해 반영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공모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배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엄격히 구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신규사업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인증시설 확보 사업으로 25억 원이 반영되었는데 국가기술자격시험검정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사업에 포함시켜도 무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신규사업으로 분류한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자격검정에서 산업현장수준에 맞지 않는 낙후된 검정시설·장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서 기업체, 대학 등 민간의 우수한 시설·장비를 검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도 2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도 했습니다.

그런데 동 예산의 성격은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는 산업인력공단에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기는 곤란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김종률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와 별도로 고용보험기금에서 자격검정 사업 지원을 2007년 한시적으로 신규사업으로 96억 260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마 일반회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장관님도 잘 아시지만 지난번 환노위에서도 무분별한 기금사업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일반회계편성 확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불과 1년밖에 안 된 얘기인데 암만 일반회계가 부족하다고 해도 이렇게 기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예산편성에 제가 관여해 보니까 애로가 많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들은 요구하는데도 예산처에서 칼로 자르듯 탁 잘라버리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김종률 위원**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예산을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취업자 관리사업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이렇게 각각 16억, 69억을 배정했습니

다. 그런데 이 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하고, 특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사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수행할 사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합해서 일반회계로 충당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마 내년부터는 통합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률 위원** 관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입니다.

외국인취업자 관리사업은 지방에 있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장 변경을 한다거나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점검을 나간다거나 출장여비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대림동에 있는 지원센터처럼 외국인들에 대한 고충상담, 통역 지원 등등으로 조금 사업이 다릅니다.

○**김종률 위원**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률 위원** 그것은 소위에서 좀더 따져 보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노사협력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지난번 노동부 본부 감사 때도 본 위원이 노동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정 노동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각 노동단체의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지원단체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감사 대상이 늘어나는 점을 우려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과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양 노층에 배분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이제는 엄격하게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성 예산으로 지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예산 중에서는 민노층이 끝끝내 사업비로 받을 수 없다 해서 그쪽은 지원도 안 할 정도로 엄격하게, 앞으로 사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협력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김종률 위원** 지원결정방식을 변경했는데 그 이외에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서 환수가 이루어져서 보조금이 특히 필요한 단체에게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지원결정방식 변경한 것과 관련

해서 노동단체들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할 때도 특정 소속단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앞으로 그 점도 잘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김종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형규 委員**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 지난번 국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무려 11개 부처가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의 경우는 전년대비 195%가 늘어난 1500억 원 이상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일자리라는 것이 말하자면 팬찰은 일자리가 되지 못하고 월 70만 원대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 지나가면 계속 일자리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거의 세금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데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몇 개 늘어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정성과 일정소득이 보장되는 이른바 팬찰은 일자리 증가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라는 것이 결국 현재의 실업난이나 청년실업난에 필요한 일자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2배나 늘리면서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얼핏 보면 과거의 공익사업, 공공취로사업과 별다른 것이 있느냐 이런 비판적인 지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과는 다른 것이 굉장히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가미하고 있고요.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지만 앞으로 기업연계형 광역형으로 발전하고, 사회적기업법이 통과되면 지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과도기에 투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孟亨奎 委員** 월 70만 원 또 세금지원으로 유지되는 이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기업연계형이나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동부가 2007년도 사회적 서비스에 사용될 1500억, 이중 3분의 1 이상인 588억 원을 새롭게 만들 공모형 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형 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형 사업은 지방에서 NGO들이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 사업을 심사해서 승인해 주는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孟亨奎 委員** 결국은 새롭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분야를 찾겠다 이런 얘기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그렇습니다.

○**孟亨奎 委員** 방법은 주로 NGO인데, 지자체는 여기에 관여 안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서 그런 사업이 발굴되어서 올라오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런데 현재 공급되고 있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도 저임금과 불안정성과 허점투성이인데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이런 수준의 일 자리를 공급하겠다는 것도 뭔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작년에도 공모형 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이번에 확장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지방의 맞춤형 사업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분권적으로 한번 시도하자고 해서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서 공모하기 때문에 더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공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장관께서는 기업형 또 맞춤형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롭게 찾는 분야라고 해도 지자체의 경우다 그러면 공공근로 이상의 수준이 되기가 어렵지 않나, 또 금방 말씀하신 대로 NGO의 경우도 단순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 우려가 대단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 서비스가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복지 문

제와 관련이 되는데 아예 이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11개 부처가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보건복지부 위주로 재편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단순히 복지 차원에서 주는 수혜적인 일자리는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으로서 키워 나가기 위한 일자리 사업이고요. 벌써 작년과 금년도 큰 차이가 있는데, 많은 NGO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해서 자기들이 해 가지고 다시 공모하는 것 보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孟亨奎 委員**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원센터, 아까도 조금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요.

금년 11월 현재 집행률이 9.8%로 나와 있던 말이지요. 금년에 16개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입이 종료된 곳이 인천북구센터 하나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11월, 12월에 한꺼번에 다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현재 물색이 되어 있어서 11월 말까지는 거의 계약이 완료될 것 같고요, 해서 불용액은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2007년도에 28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고용지원센터를 매입하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孟亨奎 委員** 그런데 2007년도에 고용보험기금이 4000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던 말이지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기관별로 보면 적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고용서비스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것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사서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표현하기가 좀 뭇하지만 수익성 차원에서조차 결코 뒤지는 사업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孟亨奎 委員** 저는 청사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고용보험기금이 한 40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기금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단년도 수입적자는 되지만 전체 고용보험이 지금 많이 적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정도 써도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孟亨奎 委員**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마는 노동부의 명칭 변경, 장관님이 또 친절하게 편지까지 보내셔서 잘 읽어 봤습니다마는 정부조직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4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노동부의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현재 노동부 2007년도 예산에 명칭변경 관련한 항목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법이 통과된다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 부처의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委員** 예비비로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원래 노동부에서는 6억 4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4억 6000만 원으로 깎아 놓았군요. 4억 6000만 원의 내역을 보니까 현관 교체가 4700만 원, 유도입간판 교체가 9400만 원, 내부간판 교체가 4700만 원, 직인 교체가 4700만 원, 고용지원센터 간판 교체가 1억 9400만 원, 그러니까 간판 교체비용 합계가 4억 3000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MI 제작, 노동부의 상징을 교체하는 것이 3000만 원, 장관께서는 이 편지에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바꾸는 각오를, 이름을 거는 일은 목숨과도 같은 명예를 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간판을 바꾸는 데 4억이 넘는 돈을 쓸 게 아니라 현재 노동부의 이름을 걸고 고용 관련된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더 명예로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님은?

○**노동부장관 이상수**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노동부의 노동행정이 사실상 노사 문제에서 고용으로 넘어가고 있고, 인원이나 예산도 고용 쪽이 많기 때문에 실재를 반영하는 그런 이름이 좋겠다 하는 것을 들고요. 더 큰 이유는 지금 국민들이 노동부가 노사 문제에만 관여하는 부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다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고요.

한마디로 이름을 간다고 해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름을 바꾸고 국민한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열심히 하는 자세를 갖겠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비용 이상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孟亨奎 委員** 그 취지라든지 장관의 뜻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나라 살림살이도 시원찮고 또 빚만 늘어가고 있는 이런 살림살이에 굳이 이름 바꾸는 데 4억 6000만 원씩 쓸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 고용지원센터의 직업상담원, 이분들이 지금 공무원화를 추진하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孟亨奎 委員** 그동안 이것을 공무원노조에서도 반대하고 직업상담원노조에서도 반대해서 한동안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정이 되었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각각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데요, 상담원들은 최근에 자신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80% 이상이 찬성을 해서 상담원노조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직협 쪽에서도 그 내용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노동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孟亨奎 委員**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직업상담원을 공무원화할 경우에 시험 같은 것을 쳐야 할 텐데 이 경우에 일선 직업상담원들이 상담 업무는 뒷전으로 하고 시험공부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되고요.

두 번째는 직업상담원은 비정규직이 아니니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의 대상도 아니고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된다면 공무원의 대폭 증가라는 측면에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상담원들을 공무원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한 조직 내에서 공무원과 상담원이 혼재해서 일을 하니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지원센터는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의 가장 허브이고 핵심인데 서로가 조화롭게 일을 하려고 하면 같은 신분을 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孟亨奎 委員** 거기에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사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공무원이고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데, 고용서비스를 선진화하는데 굳이 상담원 일 자체를 공무원이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차라리 직업고용센터를 공단화해서 1조직 2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공단화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지방 단체로 넘기는 문제도 고려를 해 봤는데요.

우선 공단화 문제는 고용지원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공무원이 아닐 경우에 강력한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두 번째는 공단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많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남아서 현재로서는 다른 나라처럼 공무원화해서 하는 것이 가장 낫겠다 해서 공무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영奎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맹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감사합니다.

우원식 위원입니다.

제가 세 번째 국정감사까지 하면서 근로감독 업무에 대해서 죽 지적을 해 가다 보니까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많다, 근로감독관이 부족하다,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근로감독관 정원이 1630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 있지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근로기준국장 하갑래입니다.

지금 1630명 중에서 284명을 충원 못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지금 면접시험까지 봤는데 11월~12월 중에 해 가지고 연초까지는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렇게 많은 결원율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17% 정도의 결원율을 갖고 있는데 빨리 좀 채우시고요.

근로감독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노사 협력이나 분규 예방…… 지난번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청에서도 봤지만 분규 예방하는 데 제대로 역할을 못 했어요.

그래서 분규 예방에 있어서의 역할, 산업재해 예방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지도비 현황을 보니까 89년에 10만 원이었고 96년에 13만 원으로 한 3만 원 올랐고 2000년에 한 2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정도 액수가 굉장히 적다, 도저히 일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지금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입니다. 경찰하고 비교하면 지금 경찰에게는 월 25만 원~3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하면 약 5만 원~1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우원식 위원 그것 올려 줄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편성할 수 있어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올해 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96년 13만 원에서 2000년에 20만 원으로 올렸는데 이제 한 7년 지났거든요. 이제 올릴 때가 됐어요. 한 10만 원 정도 올린다고 하면 전체 예산이 19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데 19억 정도 편성은 제가 여기저기 살펴보니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말 좋으신 말씀인데요. 환노위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본회의에서는 제가 책임지고 한번 관철을 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영세자영업자 훈련은 작년에 60억 중에 한 6억 얼마 썼더라고요. 올해 30억 편성했는데 여기에서도 일부 뺄 수 있을 것 같고 구석구석에 그런 정도 예산, 불필요하게 커다랗게 만들어 놓은 예산에서 떼서 하면……

근로감독관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포항청 하면서 포항청장에게 근로감독관에 대한 의식의 문제를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해야 될 역할, 노사 협력이나 분규 예방이나 산재 예방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있는 수사관들과 평형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업무지도비를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지적해 둡니다.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지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과거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가 갖고 있는 한계, 좋은 일자리 또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일자리가 아니고 아주 단순적인 일자리에서부터 좀더 나은 일자리로 만들어 보자 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현장에 가서 보면 그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 그게 한 70만 원~80만 원 돼서 사실 액수가 너무 적어요. 이제는 NGO에서 만들어서 오는 좋은 사회적 일자리,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지금 인원을 특정해 놓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니까 임금 수준을 현실화한다든지 보다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래서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로 가려고 했으면 이제 시작한 지 몇 년 됐으니까 현장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를 잘 검토해서 실제 사회서비스 부분의 일자리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수의 정도라든가 이런 것을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같은 사람, 같은 업무에 1년 넘으면 또 다시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복지와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로인데 하다가 중단되어 버리니까, 한 해 하고 그 다음해는 인정을 안 해 주니까, 좋은 일자리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 해만 하고 끊어지니까 이게 뭐냐 하는 불만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일자리로,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100만 개의 하다가 마는 일자리가 아니라 한 50만 개의 지속적인 일자리라도 만들어 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금에 관해서 오늘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면서 결의안을 낸 게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고 일반회계에서 잘 끌어올 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를

점점 확충해 가야 된다는 정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반회계와 기금의 사용 이게 구분이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국민한테 세금 거두어서 여기저기에 다 쓸 수 있는 것인데 기금은 특정한 사람들한테 받아서 특정한 목적에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너무 구분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한국고용정보원 예산에서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쓰고 운영비는 기금으로 쓰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일반회계와 기금 편성의 구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것 앞으로의 사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어떤 기관이든지 운영비 등은 기본적으로 일반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단지 한국고용정보원의 운영비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운영비가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에 고용보험기금에서 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냥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요.

장관님께서서는 어쨌든 고용보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시작을 해 놓으면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일반회계를 자꾸 줄이고 그것을 기금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고용보험은 고용을 늘려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사용되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산 취득하는 데로 좀더 많이 쓰여지게 되고 점점 그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이 지금은 많이 남는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검정사업 지원에 96억을 편성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제는행 전면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수수료 수입이 533억이고 투자가 504억이에요. 한 30억 정도 이득이 되거든요. 이런 돈을 그대로 두고 쓰지 않으면 출연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받는 돈이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쓰지 않고 그 비용

을 기금에서 가져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확실히 그런 점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기금은 기금 목적에 맞는 데 한정해서 쓰도록 노력하라는 취지이신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처음에 가닥을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적드리는 것인데요, 가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라구요.

폴리텍대학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신기술장비확충사업에 신기술연구센터가 있어요. 설계비 18억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누구 잘 아시는 분 나와 보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사업부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아직까지 부지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아마 기본설계비 등 기본 사업을 위한 비용이 내년 예산에 계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부에서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부지 선정도 안 돼 있는데 설계비부터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설계비라기보다도 정확히 얘기하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비용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저희들로서는 정말 전문적인 기술인력의 양성이 필요하고, 특히 신기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별도로 또 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옳느냐, 기존의 폴리텍대학의 부설연구소로서 시작하는 것이 옳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어서 종결되면 적절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하여튼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 신기술장비확충사업과 유사한 작업이 직무능력 향상 훈련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점에 대해선……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입니다.

○**우원식 위원** 2개가 뭐 하는 것이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우선 신기술장비확충사업은 기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용 훈련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우원식 위원** 그러면 직무능력 향상 사업은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 훈련 강화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 폴리텍대학이 재직자 향상 훈련을 대폭 확대하기 때문에 향후 4년간에 걸쳐서 재직자 향상 훈련을……

○**우원식 위원** 두 사업 다 노후장비를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명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우원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상으로 하는 훈련생은 다를 수 있지만 설치하는 장소가 다른 겁니까?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설치하는 장소는 같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재학생과 다른 직종에 대해서……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폴리텍대학에 앞으로 양성 훈련을 위해서는 노후된 장비를 개선하자는 것이고 향상 훈련을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사자는 것인데……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예, 그렇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다 장비 사자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고용정책본부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대체적으로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으로 하는 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름도 다르고 중복되지 않고 다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름이 약간 달리 되어 있지만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다 필요한 장비 구입비입니다.

○**우원식 위원** 장비구입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하나는 양성사업, 하나는 향상사업, 우리가 폴리텍대학에 대해서는 향상사업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성과

항상, 똑같은 장비 구입을 하면서 이것을 구분하는 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노민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답변하지요.

사실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양성사업에 주력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학교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폴리텍대학이 향상사업, 재직자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다시 거기에 맞는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해서 기업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 훈련 대학에도 장비를 구입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 차원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장비입니다. 한쪽은 양성교육을 위해서 한쪽은 향상교육을 위해서 다 필요한 것이지요.

○**우원식 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장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셔도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구분해서 마치 다른 사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배경으로 하는 설명자료가 똑같아요. 뭐가 부족하다고 그래프까지…… 연도별 노후장비 누적 해상도, 이게 똑같은 자료를 근거로 하는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해서 중복 지원하는 게 있는데 중복 지원하기보다는 내년도에 해 주어야 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채워 주고,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을 2개로 분류해서 하나는 양성이고 하나는 향상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복 지원되는 데도 있고, 내년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아직 지원 못 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을 통으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혹시라도 같은 대학에 중복된 기자재가 새롭게 도입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제일 많이 하신 부분이 사

회적 일자리 창출인데 저도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7.1% 오르고 그중에서도 고용정책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하였고, 고용정책사업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 가장 주목받는 사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보입니다.

참여 인원도 6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었고, 또 최저연급에 맞추어서 지원 단가도 77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법이 아직까지 발의되지 않아서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예정한다라는 장관님 말씀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역형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것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 늦어질 것 같아서 심지어는 의원 입법을 통해서 빨리 사회적 기업법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광역형, 기업형을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광역형 또는 기업형 일자리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증대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사회적 기업으로 넘기고 또 새롭게 별도로 사회적 기업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면 점차 이 사업이……

○**제종길 위원** 장관님 말씀은 다른 위원님 질의 때 대답한 것으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사업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단기적인 지원이고 안정된 질 좋은 자리로 연계되지 않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도 보면 내용은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적 기업 지원의 근본적인 취지는 그런 초기 지원을 통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이고 질 좋은,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임금을 가지고 근로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지금 국가가 전부 다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공익형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해서 사실 내년에는 공익형 사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금년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내년 3월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3월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정말 광역형 사업, 자립 재할형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점점 잘 되어 나가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법이 통과되면 사회적 기업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간사, 우원식 간사와 사회교대)

○제종길 위원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 결국 노동부 고용사업의 성패가 달린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공익형은 줄이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저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물론 7월 1일부터 사회적 기업이 지원되어서 그런지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그렇게 공익형을 일시에 바꾸는 데 따른 충분한 준비에 관한 예산이 사실 부족하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참여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 받는 기간 동안에 경영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부나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은 사실 그 성과가 그 기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고 일자리로 바로 이어진 경우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오히려 줄이고…… 저는 오히려 사회적 기업 일자리가 좀 늦어진 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 기간 지원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훨씬 안정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은 사회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기 통계에 보면 한국은 아직 2.0%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대개 선진 외국은 10~20%가 사회적 기업인데 이런 것을 빨리 노동부가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그 부분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맹형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일자리와 비슷한 사업들을 다른 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노동부가 예산을 가져 와서 쓰지는 못하겠지만 일괄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갖춰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진짜 사회적 일자리가 광범위하게 생기고, 또 1년 정도 지나서는 그것이 안정된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고용정책의 핵심이라고 보아집니다.

장관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고……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익형은 금년으로 마감을 하고요, 내년에는 자립지향형이나 광역형을 주로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까지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3년 정도 잘 평가하면서 지도를 하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약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심이 된 지역고용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고용심의회에서 공유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줘서 가능하면 중복도 피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엄청난 예산도 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부의 고용사업 핵심이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산과 지금 현재 부진하거나 또는 전환을 생각하는 예산을 줄여서 거기에 대비하라는 얘기를 드리고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감사하신 말씀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청년실업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국감 때 지적한 것은 청년실업 대책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아르바이트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350억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연수시간 2개월에 연수수당 30만 원인데 실제로 가면 커피를 탄다든지 물건을 나르다든지 이런 일에 주로 종사하고 실제로 연수하는 직장의 고유한 직종을 배우는 데는 사실 소홀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같은 프로그램이라면 제가 보기에 이 프로그램을 상당히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이 사업이 지금 당장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직업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귀중한 체험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종길 위원** 물론 그 직장에서 두어 달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대학생들이 짐작할 수 있지만 실제로 희망하는 것은 돈은 적게 받더라도 그 직종에서 현 근로자와 똑같은 형태의 근로를 해 보는 것으로 체험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심부름하는 일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본래 노동부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기업들이 그렇게 확실히 하도록 확답을 받아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이 예산은 잘라서 다른 오히려 취업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좋은 지적처럼 생각되고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밖에도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과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기능 확충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대학처럼 운영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실업계 고등학교는 오히려, 제가 국감 때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기능인력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를 통해서 직장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능인력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사실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기능도 대학교육처럼 엇비슷하게 만들지 말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대학과는 다른 진로나 직장 방향, 인생 방향으로 가고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생활하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산도 거기에 준하는 형식으로 짜서 47억인가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장관님이 좀 검토를 해 주셔야지 되지, 그대로 하면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노동부가 이렇게 하든 말든 실업계 고등학교 가서 좋은 수능을 받아서 우수한 학생들은 다 대학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각별하게, 특히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노동부 예산이 저는 사실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을 보면 이 예산이 많은 것이고 실업계 고등학교가 기능인력을 양성해 내지 못하는 모순점을 보면 이 예산이 현저하게 적다고 보는데 장관님이 남은 짧은 기간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다음에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해외 취업 지원 사업에 1인당 약 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약 1000여 명으로 시작했다가 내년에 2000명까지 발전하는데 제가 일전에 인력공단에서 얘기를기로는 외국에서 굉장히 한국의 우수한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나라가 많은데 어학이 안 돼서 못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수과정에 약 40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취업률이 한 60%라고 감안하면 1인당 한 7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들어가는 셈인데 이것이 다른 실업자 훈련에 비해서 그렇다면 질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보내지도 못하고 거기 가서도 올바른 대우를 못 받는 일자리라면 이것이 과도하게 많은 연수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분야에 대한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우선 인력공단이사장님 얘기를 정확히 들어보고 싶은데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인력공단 이사장 김용달입니다.

물론 국내 실업자 훈련하고 비교해서는 비용이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국내 일자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선 장기적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다는 취지……

○**제종길 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읽어서 알고 있고요. 그전에 인력공단에서 홍보하신 대로 외국에서는 그런 인력수요가 많은데 진짜 우리가 어학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부터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가장 부족한 게 어학실력입니다.

○**제종길 위원** 요구하는 데는 많아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지금 확실한 숫자는 나중에 다시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해외에서 요구하는 숫자에 맞출 수 없는 정도입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훈련을 확실히 해서, 그런데 왜 연수생의 60~70%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연수생들이 지금 해외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상 연수기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지요. 지금 예년에 보면 60~70%밖에 취업이 안 되고 있고 일자리 자체도 임금 수준이 국내보다 나은 것도 아니고 또 국내에 돌아와서도 우수한 인력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제 조사에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데 오랫동안 외국에 있으면서 확실하게 영어를 배워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싶어도 비자기간이 한계가 있어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어학훈련을 시킨다든지 부수적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렇다면 해외 취업이 사실 부실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요구했으면 가서 체류기간이라든가, 물론 임금이 적다하더라도 거기서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다거나……

작년에 제가 국회의장을 모시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을 다녔는데 그쪽에서는 IT나 첨단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수요가 있는데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인력공단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 좋은 자리, 아니면 그 나라에서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일자리로 보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예산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이사장님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인력공단이 작년 11월 28일 단체협약을 통해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대비 현실화를 약속하셨지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예.

○**제종길 위원** 그것이 단체협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안 된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사장 김용달** 지금 현재 비정규직 부분을 정규직화 시켜서 현실화시키고려고 예산처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는 비정규직 현실화 대책을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업과 맞물려서 같이 해결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도록, 내년 안에는 반드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원식**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홍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홍준 위원** 안홍준 위원입니다.

2007년도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사업의 형태별·평균임금별 세부 내역을 보면 월 평균임금 40~69만 원 수준의 일자리가 총 지원 일자리 수 17만 5842개의 14.2%인 2만 4880개이고, 총 지원액 1조 2586억 원의 11.3%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임금 수준의 일자리는 2007년도 월 최저임금 예정액 수준인 72만 7320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을 형태별로 살펴보면 2007년도 11개 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중에서 정부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인 보수가 없는 공익형 지원을 통한 일자리 수가 전체 21만 2514개의 92.9%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부로서는 과거의 공공취로사업 같은 일자리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처별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특히 복지 분야 쪽에서는 지금도 복지 수혜적인 일자리, 과거의 공공취로사업처럼 그런 일자리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로 열악한 급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노동부에 관한 한 저희들은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별로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기획예산처의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은 동 사업과 관련된 11개 부처 세부사업에는 신규사업이 많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안이 제출된 2006년 10월 현재 중기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단 해당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를 감안해서 향후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이 반영된 중기재정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재정의 재원배분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노동부가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가 중심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제는 지방고용심의위원회가 다 구성되어 가지고 지역에 맞는 맞춤형, 지속적인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다고 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에 사회적일자리를 하고 있는 부처가 한번 모여서 이것을 부처별로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하자는 회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말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일반회계의 외국인취업자관리사업과 고용보험기금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운영 지원사업은 사업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산해서 수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기금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일반회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2007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되는 장애인고용촉진 지원사업 200억 원도 고용보험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

기금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기금조성 재원과 목적사업 간의 연계성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서 사업의 추진이 어렵다면 일반회계에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의 전출을 통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약간 달리하는데요.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운영비는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더라도 장애인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일부 갖다가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성화해서 거기에서 써야겠지만 부족하다면 고용보험기금에서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서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사업비 규모를 보면 그중에 6개 사업이 부진한데 특히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집행률이 6.5%이고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은 집행률이 0%입니다. 그러나 집행률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예산은 도리어 증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임금피크제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많이 기피하고 아직도 홍보가 덜된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처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근로자들도 내가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였을 때 나의 근로시간이 정년이 연장되므로 더 많아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참여할 텐데 나의 임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임금피크제가 정말 근로자한테 도움이 된다, 당신의 고용시간을 연장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면서 설계를 바꿔 나간다면 앞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잘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2007년도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4

조 5118억 원은 2006년도 당초 계획 3조 9002억 원 대비 15.7%, 2006년 8월 현재 계획 현액 4조 1081억 원 대비 9.8% 증가한 규모입니다. 2006년도 계획 변경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사업비 증가율은 5.3%에 달합니다.

계획 변경 사업 중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사업비 384억 원은 2006년도 8월 현재 계획 현액 대비 4.3%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당초 계획 대비 395.3%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대제전환지원금 사업비 230억 원은 2006년도 8월 현재 계획 현액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지만 당초 계획 대비 99.9%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적절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저희들은 연말에 정말 제대로 한번 지원사업을 평가해 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생각이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2007년도 861억 원의 예산이 계획된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은 중소기업과 훈련컨소시엄을 구성한 운영기관에게 인건비, 시설비 및 장비비, 훈련프로그램개발비 등을 연간 15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소시엄 참여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고 중소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운영기관이 되는 중소기업형 컨소시엄 구성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소기업, 사업주단체-중소기업 형태의 컨소시엄 훈련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사업은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미비점은 고쳐 나가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5개 취업취약계층 중에서 사업비가 감소한 청년 및 장기 구직자 등의 2개 계층을 위한 사업비는 1845억 원으로 2006년도 2269억

원 대비 18.7% 감소하였습니다.

이들 2개 취업취약계층의 사업비 감소 규모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79억 원, 고용보험기금 사업비는 34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및 장기 구직자 등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안은 감소한 반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안은 2006년도 대비 195.2% 증가한 1527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예산안 증가로 인한 청년 및 장기 구직자 등의 일자리 증가가 동 계층을 위한 재정 감소로 인한 효과를 충분히 보전할 만큼 사업 성과가 있는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점에 관해서도 저희들이 연말 사업 평가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평가해서 문제가 있다면 고쳐 나가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04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씩 증가해서 적립금 규모의 과다 여부에 관해서 매년 국회 예산 및 결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매년 둔화되어 2007년도 적립금 규모는 2006년도 9조 1468억 원에서 3.9%가 감소한 8조 7897억 원이 적립될 예정인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고용보험기금은 경우에 따라서 효율을 줄여야 된다고 할 정도로 적립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편 또 적극적인 시장정책을 쓰고 이렇게 해서 고용보험이 단기적으로 봐서는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홍준 위원 고용보험 사업별 보험료 수입 대비 적립금 배수를 보면 2005년까지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분리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통합을 합니다. 2005년도 고용안정 분야를 보면 6배 정도 적립이 됐는데 2006년도 통합을 하다 보니까 2.4배, 2007년에는 2.1배 정도로 저는 불필요하게 과다하게 적립이 되었다고 보는데 적절한 적립금이 몇 배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말씀처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계정을 합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적립금의 규모가 약간 줄었다고 보이지만 앞으로 저희

들은 고용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적립금은 있어야 된다고 봐서 요율을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 상태는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안홍준 위원** 노동부 소관 5개 기금 중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57개 기금 중 국민연금기금 다음으로 자산운용 규모가 큰 기금이지만 외부위탁 운용 비중이 높고 외부위탁 운용 실적도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 결과에 의하면 외부위탁 운용자산 비중은 고용보험기금이 72%, 산재보험기금이 70%로 사회보장성기금의 평균 위탁 운용 비중 13.5%보다 높습니다. 외부위탁 자산운용 수익률은 고용보험기금이 4.2%, 산재보험기금이 4.4%로 사학연금 16.8%에 비해 저조합니다.

고용보험기금 및 산재보험기금의 기금관리 주체는 노동부인데 자산을 운용하는 노동부 내 소속 인력은 6명이고 이 중에서 전문인력은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 규모 1조 원 초과 기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76조에서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에서는 아직까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산운용전담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작년에 두 사람밖에 못 늘렸고 내년에도 약간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늘어난 인원까지 포함시켜서 전담반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익을 증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홍준 위원**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2000년 이후 매년 큰 폭의 기금수지 적자가 발생해서 적립금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430억 원을 지원받았고 2005년도와 2006년도에도 일반회계와 재특회계로부터 차입금을 900억 원과 40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200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만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사업주 부담금을 2006년도 1349억 원에서 184억 원이 증가한 1533억 원으로 계

획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장애인촉진기금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문제, 의무부담금을 더 많이 받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적용재해율을 폐지해서 실질적으로 봐서는 의무고용률이 높아진 것은 있고요. 부담금도 현재 50만 원인데 앞으로 또 기회를 봐서 높여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산재예방사업비는 산재 예방을 위한 실사업비보다 시설건립비와 운영비 및 인건비 증가율이 더 크다는 점은 산재 예방에 대한 노동부의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서 향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산재 예방은 지출을 줄인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재예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홍준 위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제1항은 “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에 근거해서 2007년도 산재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보험운영비의 경우 2006년도와 동일한 60억 원이 계획되어 있지만 보험사업관리운영비 1279억 원의 4.7%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산재예방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경우도 2006년도와 동일한 87억 원이 계획되어 있어 운영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기술지원 및 안전의식 제고 등 직접적인 산재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운영에 따른 비용이 민간사업주의 보험료에서 주로 충당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의 사무집행 비용의 국가 부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07년도 산재보험 및 산재예방사업 관리운영비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확대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실제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적게 오고 있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넓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흥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은 힘들게 답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뒤에 앉아서 즐기고 있으면 안 되지요. 그리고 껌 씹는 직원은 껌 뱉고, 졸리면 자유롭게 나가서 세수하고 들어와요.

다음은 존경하는 신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상진 위원** 신상진 위원입니다.

내년도 노동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노동부로 부의 명칭을 바꾸면서 고용 쪽에 많은 예산을 증액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526억,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7600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07년도에 사회적 일자리 예산이 정부 전체에서 총 1조 4000억이 잡혀 있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신상진 위원** 노동부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만 놓고 본다면 15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데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류의 사업들에 대해서 노동부가 주무부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런데 실효성, 성과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난번 국감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청년 일자리 예산이 2004년도부터 2조 4000억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청년 일자리가 늘기는커녕 청년 일자리 구하는 수의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삼사십 만 정도의 일자리가 오히려 더 줄었고 청년 실업은 더 늘어났습니다.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고용에 중점을 두는 게 사회적 분위기로 맞기는 하지만 실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고용에 대한 노력을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느냐, 본 위원이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주

부나 고령층 고용촉진 단기적응훈련, 이런 것만 보더라도 1주일 이내에 그만두는 주부들이 50% 정도 되고, 또 장애인고용촉진사업만 해도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또 고용 증대를 위해서 사업체에 지원하는 것이 여러 분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장애인들만 해도 취업하고 6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또 그만두는 경우가 50% 되고 1년 이내를 보면 60%가 넘습니다. 결국은 취약계층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 또 거기에 따른 장애인시설비 지원,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라면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이 결국 취약계층들에 대한 단기직업훈련이든 직업개발훈련이든 장애인의 고용촉진이든 사업자에 대한 고용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주는 전부 대단히 실효성 측면에서는, 예산 투입 대비 결과는 형편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립니다.

장관님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을 놓고 볼 때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환경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환경도 개선하면서 중소기업도 발전시키고, 또 서비스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고용지원서비스를 확대해서 간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 일자리라도 창출해 가지고 그나마 실업자를 줄이자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노동부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어떻게 달랠 수 있느냐,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하는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부는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본원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신상진 위원** 장관께서 눈물겨운 노력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눈물겨운

대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당정협의회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에 재경부가 주가 되어서 하고 또 노동부, 복지부 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각 부처마다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것을 하고 있어요.

전에 장관께서도 어떻게 보면 부처끼리 경쟁적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말씀대로 정말 진정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사람을 구하고, 또 일할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이것이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사회환경, 기업환경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 규제완화라든가 또 수도권이면 수도권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것도 굉장히 말썹이 많았잖아요. 반도체 산업으로 6000명의 고용 증대 효과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꾸 그것을 막으니까 중국으로 갈까 어쩔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국 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눈물겹도록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그리고 청년 일자리 만들어도 인턴이나 단기 일자리 같은 것, 횡수를 많이 만들어서 사회적 일자리를 보면 연인원 수는 계획인원 대비 오히려 초과 달성이 많아요. 예산 집행률은 오히려 그것보다 떨어지는데도, 100%가 안 되는데도 인원은 계획인원보다 많습니다. 그런 일이 많아요. 결국은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많이 바뀐다, 단기 일자리들이 많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노동부에서 범부처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에 질의도 하고 주장도 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 부처의 협력 또는 협의, 단일화, 하나로 만들어서 좀더 효율적인 그리고 경제정책이라든가 대기업정책 등등 해서 그런 정책을 포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데 국민 세금을 쓰는 꼴이 된다, 이런 것을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동의하고요.

아까 제가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노동부 공무원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노동부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와서 보니까 정말로 노력하고 있고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특히 고용노동부라고 고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기를 올려 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고용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한다고 한다면 좋다, 이름 바꿔서 한번 해 보라’ 이렇게 격려도 해 주시고 ‘고용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내겠다’ 한다면 ‘좋다’ 예산 지원해서 ‘해 보라’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신상진 위원 장관께서는 참여정부에서 힘이 있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 노동부의 소관 사업 안에서, 그 틀 내에서 한계와 문제를 아시면서 거기에서 파문해서 일하실 게 아니라 좀더 정부 간, 부처 간의 협력이라든가 경제정책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환경을 높여주고 그러면서 성장정책으로 가야 된다, 이런 큰 틀에서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이 시간에도 대통령님 주제로 고용 문제에 관해서 대토론회, 정책수립회의가 있는데 제가 못 가고 차관을 보냈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지만 부처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신상진 위원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산재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진폐예방 경비가 2006년도에 5억에서 2007년도 예산에는 4억7000 얼마로 좀 줄었어요.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준 이유가 뭐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뒤에서 답변 준비 좀 해 주시고 준비할 동안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예산에 보면 자격검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검정 시행 및 관리 사업을 보면 2006년도 예산보다 2007년도 예산이 130억, 37%가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검정 시행 및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인력공단 이사장님……

○신상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인력공단 이사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문제은행에 출제 오류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정비하기 위해서 한 41억이 들어가고 검정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36억이 들어가는 등 일반 회계연도보다 내년도에 출제 관리 또는 자격 관리의 전반적인 개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신상진 위원** 본 위원이 전에 국감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자격증 수수료 이런 것에 따른 수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자격증 수수료, 시험 수수료 이런 게 너무 비싸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시험장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강하는 데 썼다고 하는데 그 쓴 퍼센티지가 한 20%나 십몇%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운영경비로 썼어요. 그런 것은 이번에 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실제 여러 가지 시험 수수료는 대부분이, 한 90% 정도가 시험을 집행하는 경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신상진 위원** 그것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도 시험에 들어가는 장비 마련 등등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본 위원이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지만 십몇%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산업인력공단 운영경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가 나중에 제 얘기에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일자리 찾으려고 또 자격증 따려고 돈 없는 젊은이들이 와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너무 착취하는 것 아니에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그런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험 수수료 등과 비교하면 우리 인력공단에서 받는 것이 훨씬……

○**신상진 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이 자체로 해야지요. 다른 데하고 모든 조건이 같지 않잖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물을 활용하고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관리인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동일인들 또 동일 장소에서 다른 기관……

○**신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수수료 관련한 수입 지출에 대해서 본 위원

에게 서면으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예, 알겠습니다.

○**신상진 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근로조건보호사업에서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에 2006년도 7억에서 2007년도에 23억으로 236%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렇습니까?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근로기준국장 하갑래입니다.

○**신상진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취약근로자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은 가장 크게 늘어난 게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자파견제도 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비정규직 입법이 되면 여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감독도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홍보가 좀 늘어났고요.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이 올해는 12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5개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신상진 위원**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네요?

○**노동부근로기준국장 하갑래** 주로 교육·홍보·감독하는 데 들어가는 수용비, 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신상진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동행정지원 부분인데 지방청 인건비가 있지요? 지방청 인건비가 2006년도에 970억인데 2007년도 내년 예산에 1200억으로 한 230억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이유가 됩니까?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입니다.

인력 증원이 주된 이유입니다.

○**신상진 위원** 이것도 인력 증원이예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예, 그렇습니다.

○**신상진 위원** 왜 이렇게 인력 증원을 하지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금년 초에 인력 TO가 늘어났는데 실제로 증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년 1~2월경에 금년도 TO 늘어난 것의 절반 정도가 사실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항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상진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는 데 마치기 전에 아까 답변 못 하신 부분 해 주시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입니다.

2006년도에 5억 1100에서 내년도에 4억 7900으로 3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는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이 삭감되고 진폐심사수당 인상이 1800만 원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3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신상진 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없습니다.

○**신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신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10조 5000억 원 잘 사용하셔서 노동부가 국민한테 사랑받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실 일을 안 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실 일을 안 하느냐고요?

○**배일도 위원** 예, 예산 배정도 앓고,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면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에 빼든지 넣든지……

○**노동부장관 이상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배일도 위원** 수도 없지요. 어떤 부분은 뭐 어떤 부분……

우선 시간 되는대로 제가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지적하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때를 놓치면 정말 국가적 위기 상황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가 자꾸 늘어나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줄어들다가 최근에 늘어났는데 그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었습니까?

○**배일도 위원** 원인이야 항상 있습니다.

늘어났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자동차 4사의 파업……

○**배일도 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지수가 노사관계 관련해서 125개국이 평가대상인데 몇 위 했는지 아시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배일도 위원** 방법은 각 나라마다 다 있는데 그래도 1등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등 하는 나라는 잘 나오더구만요.

125개 국가 중에서 114위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또 다른 데에서…… IMD 같은 데에서 한 것도 있잖아요? 60개국 중에서 60위예요.

아까 노동부의 업무가 고용으로 자꾸 방향이 넘어간다, 하도 고용이 안 되니까 고용 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되겠지요. 그런데 노사관계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고 해외에서도 한국 하면 노사관계가 불안정하다, 그것이 노에 있든 사에 있든 정부에 있든, 인정하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지금 2007년도에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방 관서 국정감사 하면서 다 확인했어요. 제주도까지 확인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무원노조가 생겼어요. 공무원노조 교섭 기관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꽤 많을 것입니다. 지자체가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배일도 위원** 숫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것은 숫자이고 실제로는 위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행자부 소속에 있는 경찰청노조라고 하면 그 경찰청노조가 경찰청장하고 교섭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수도 없이 많아요.

노동부가 여기에 예산을 얼마나 배정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래서 저희들 지금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배일도 위원** 아니,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노사관계가 성립 단계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서서 교섭을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노사관계에 관해서 정확한 인식을 시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은 노동교육원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최근에……

○**배일도 위원** 좋겠다, 그것은 하시면 되고요.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 이상수**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11월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들이 노동교육원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배일도 위원** MOU를 어디하고 체결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행자부하고 했습니다.

○**배일도 위원** 행자부가 노사관계로 보면 사 측입니까? 노 측입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행자부는 일종의 사 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일도 위원** 일종이 아니고 완전한 사 측이네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배일도 위원** 거기에서 교육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하면 완전히 경총에 가서 자기들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기 노조 교육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교육이라고…… 그것은 노사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래서 노동교육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교육원이 갑작스럽게 하게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지원을 줘……

○**배일도 위원** 지금 노동손실 일수가 이렇게 커서 경제에 미치는 것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노동손실 일수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 경제적 손실까지 감안하면 수백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가 예산을……

지금 고용노동부 좋다 이거예요. 또 고용안정 좋아요. 여러 가지 사업 다 해야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가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은 고용을 말로 강조하면서도 고용의 질은 자꾸 나빠져요. 아시잖아요? 비정규직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다음에 단시간 근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아까도 장관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노동부로서는 참 눈물겹다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더욱 나빠지고 실업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자, 더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돈을 투자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노동부 하면 지금 현재 2007년도부터 한국 노사관계를 새롭게 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조금 있으면 노사관계로드맵 관련된 입법안을 올리실 것 아닙니까? 지금 유예되어 있잖아요. 유예가 되어도 교섭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교섭해 가지고 안 되면 부딪혀 버리잖아요. 근로손실 일수라는 것이 파업일수 곱하기로 나오니까 파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근로손실이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아닙니까? 인원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장관 계실 때 한국 노사관계를 새롭게 한번 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행자부, 경제기획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노사관계를 새롭게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노동부의 절대결명의, 지방관서까지 총동원해서 하셔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배일도 위원** 격려가 아니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배려를 이번 예산 심의에서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누가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편성이 되어야지요. 우리는 삭감권밖에 없잖아요. 편성을 안 해 버렸다니까요. 편성을 하셔야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말씀만 드리겠는데요, 지금 노동교육원이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맡게 되었고 내년부터 실시되는 산별노조에 대해서 맡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배일도 위원** 하시고, 대한민국의 누가 반대하면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나라를 망쳐 먹자고 하는 사람이니까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접근하세요. 인원과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한국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한번 만들어 내보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감사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리고 두 번째인데 일단 신뢰가 있어야 노동부가 말을 해도 믿을 것 아니에요? 신뢰는 약속부터 시작될 것 아니에요? 거짓말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10조 5000억 해서 고용의 질을 높인다 어쩐다, 국민들은 잘 안 믿어요. 지금 한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요.

그런데 왜 산업인력공단하고 기능대학에 비정규직…… 지난번 공공훈련인프라 재구조의 그 비정규직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정원을 이렇게 책정해 놓았어요. 그중에 채용을 할 때 우선순위를 비정규직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그 인원 채우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왜 안 채웁니까? 비정규직 예산 여기에다가 잡아 댔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점차 인원뿐만 아니라 급료 수준도 높일 것입니다.

○**배일도 위원** ‘높일 것입니다’는 사람들이 들으면 더 약오르다니까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1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안 되서 한 10% 정도 올라갔는데 나머지를 더……

○**배일도 위원** 못 올릴 것 같으면 약속을 말아야 하고, 장관이 목을 걸고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하세요.

그리고 아까 산업인력공단 이사장님 나와서 얘기하시더만요. “비정규직을 왜 정규직화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책에 맞추어서 하려고요.” 그러더만요. 제가 지난번에 물었잖아요.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이 장관이 그 대책을 다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냐, 아니면 우선 가능한 부분부터 시키라는 것이냐, 지금 환경부도 그렇고 다른 정부부처도 장관이 비정규직 대책 마련할 때까지 전혀 미동을 안고 있어요.

오히려 노사 합의 사항보다—노사 합의 사항입니다—정부 방침이 우선입니까?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이나 각종 법보다 우선입니다. 법만 충돌하지 않으려면요. 그런데 노동부가 스스로 여기려고 해요? 안 되잖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십니까?

그리고 한국의 노사관계가 이렇게 114위 꼴등으로 가는데 지금 노사정위원회 그다음에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의 심판·조정·화해 이런 기능이 없으면 결국은 붙어서 싸웁니다.

현재 비정규직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마는 통과가 되어서 업무가 폭주하리라는 것은 자명해요. 외국의 조정률을 보면 갈등까지 간 후의 조정률 말고 갈등 전에 화해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96%입니다. 4%만 겨우 갈등까지 가요. 한국은 반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률이 53%예요. 그 조정률 말고 미리 조정해

버리고 화해해 버리세요. 이런 것을 누가 합니까, 노동위원회가 해야지요.

예산 봐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해 놓고 한국 노사관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요. 국민들은 내년도 노사관계를 또 불안해해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라는 법률까지 올라왔어요. 왜? 제 기능을 못 하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모든 것을 편성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않습니까?

그리고 10조 5000억 원이 여기저기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가지 이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이 아니고 고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노동부가 지원부입니까? 돈 나누어 주는 데예요? 아니잖아요. 노동부는 돈을 안 주더라도 실제로 고용이 창출되고 노사관계가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 인력을 배치, 또 그것을 여기는 사람을 감독하고 규율할 수 있는 이런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돈 나누어 주는 데 아닙니까? 다 지원이에요. 돈 가져다가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고 클린사업하고 어찌고 장애인 고용안정시킨다고 하고…… 물론 돈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실업자가 몇 % 줄어들습니까? 이렇게 다 지원하면 장애인이 몇 % 줄어들습니까? 이렇게 다 하면 청년이 몇 명 고용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산 10조 5000억 원을 썼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노사관계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근로기준 위반도 그렇고 노동의 질도 그렇고 그런 데다가 돈 쓰라는 거예요. 한번 전면 검토해 보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말씀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배일도 위원님께서 비판적인 말씀을 했다기보다는 격려성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질책했다니까요, 격려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사관계 중에서 공무원 노사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인 교섭이 이루어질 텐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교육을 맡자고 해서 최근

11월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은 노동교육원에서 하기로 했고 또 내년부터 산별체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교육원이 정말 새롭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일도 위원님께서 앞장서서 우리 노동교육원의 인원과 자료 구입비를 올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홍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일도 위원** 제주도가 현재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잖아요. 특별자치도가 뭐니까? 특별한 행정기구, 특별한 시스템을 갖는 데예요. 현재 제주도에도 그냥 돈 갖다 쥐 버리고 말잖아요. 고용안정기금 뭐 해 가지고 다 갖다 주고 말아버리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제주도는 지금 관광도시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관광도시로 나가는데 노사가 만날 붙어 가지고 ‘투쟁, 투쟁’ 외치고 ‘너 죽어라, 나 죽어라’ 하면 관광객들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제주도는 지금과 다른 노사의 패러다임이 있어야 돼요. 노동위원회도 그렇고 심판기구, 조정기구, 거기에 있는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를 설득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힘있는 장관이라고 그러시더만.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노사관계가 125개 국가 중에서 114위라는 그런 초라한 성적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를 가리기 전에 60개 국에서 60위하는 이런 노사 갈등의 나라, 고용을 그렇게 외쳐도 고용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나라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치려면 예산 효과를 분명히 해서, 그 관계는 공무원노조 몇 사람 교육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전부 교섭 대표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사 측 대표예요. 그런 부분이 교섭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공무원이 파업하면 되겠습니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에요. 정확히 하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 홍준표** 장관, 배일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들으십시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위원장 홍준표** 이제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단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병호 위원**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 대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보면 2007년 예산안에 퇴직금 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단순 노무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하고 외주 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 등 세 가지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전혀 증액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각 부처별로 업무추진비를 5% 줄이고 여비를 10% 줄여서 660억을 만들도록 해서 660억이 저임금 근로자의 노임 단가 인상을 하는 데 쓰이고 퇴직금 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별도 편성에도 쓰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되었을 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일단 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대책을 위해 새로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내에서 줄이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줄인다고 여비를 절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재원을 충당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원 충당 방식이 그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처음에는 저희들이 청구했는데 예산처에서 다시금 얘기하기를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를 줄여서 아예 예산을 만들자고 해서 그렇게 저희들은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 예산안 편성이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달라져서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단병호 위원** 달라져서 편성이 되다니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각 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5% 줄이고 여비도 10% 줄여 가지고 660억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업무가 정확하게 줄여져서 편성되어서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줄일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각 항목별로 예산이 다 줄여져서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항목이 안 정해져 있고 계획으로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여비에서 줄이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모아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정규직 대책 재원으로 충원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맞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의 사업은 다 잡아 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려면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새로운 예산이 증액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예산은 증액하지 않고 기존에 잡아 놓은 사업 중에서 얼마를 줄여 가지고 하라 이런 식의 방침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실상 금년 하반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예측을 할 수가 없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년 5월에 사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기도 어려워져서, 하여튼 이것은 정부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어떻게든 끌어들이는 전제하에서 별도로 사업 본부를 세우고 총리훈령도 만들고 현재 각 부처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반드시 실행해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래서 노동부 본부 같은 경우에 비정규직 퇴직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던 것을 별도 항목으로 편성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단순 노무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이라든가 외주 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되어 있지 않고, 특히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등에 필요한 예산마저도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 1월에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총액 범위 내에

서 반영한다 이런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단 위원님께서 예산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셔서 그런 말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계획은 총리훈령으로 제정해 가지고,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지금 사무실도 별도로 차려서 각 부처에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를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단병호 위원 장관님이 워낙 단호한 의지를 보이시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기도 그런데 94년도에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한번 발표된 적 있습니다. 그때 발표된 이후에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새롭게 공공 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대를 하고 또 정부정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제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 이 정책이 올바르게 집행되려면 제대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구석을 봐도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실린 예산은 전혀 안 보인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부서에 계획된 사업 중에서 줄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의지만 가지고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는 거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 이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예산은 어떤 형식을 취하더라도 저희들이 반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양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는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시켜 버려요. 예산은 별도 편성되어 내려오는 것 없고, 지원되는 것 없고 자체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총액 내에서 하라고 하고, 기존의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비정규직은 전환시키라 하니까 아예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시켜 버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 노동강도가 더 강화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비정규직 대책사업이 도리어 부분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업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있다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신문을 저도 봤지만 몇 군

데 지자체에서 그런 시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에 따라서는 약삭빠르게 넘겨줘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을 주면서 개혁은 해 나갈 것입니다.

○단병호 위원 저는 이번에 환노위 예결소위에서도 이 안을 검토하실 때 실제 예산 중에 불용액이라든가 아니면 과도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 부분을 좀 삭감을 해서 아예 비정규직 예산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준표 알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고용보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사업, 능력개발사업 또 실업급여로 지출됩니다. 올해부터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고용보험사업이라는 것은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사업이 되어야 효과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용보험사업이 사실상 산업별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감안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단병호 위원 예를 들어 2004년과 2005년 고용보험 징수액과 지급액을 비교해 보면 업종별로 고용보험 징수액과 고용보험사업 지급액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05년 징수액은 전체 징수액의 17.38%가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출액은 전체 지출예산의 5.95%밖에 안 됩니다. 실업급여는 전체 급여지출의 9.22%밖에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의미라면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가능하다면 모든 업종에 균일하게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넣었다고 해서 자기가 보험의 수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용보험은 쓸 때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반드시 그 업종에서 얼마 나왔으니까 그 업종에서 얼마 써라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병호 위원 아니, 그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것은 징수액의 33.78%, 사업지급액은 41.62% 또 급여지출은 35.95%로 보험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되거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노사분규가 격렬하게 일어났던 데가 건설노동자들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단병호 위원 그렇다면 고용안정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사람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직업능력개발 이런 쪽에 더 쓰이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돈은 이쪽이 훨씬 많은데 지출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적게 나가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는 고용보험기금이 많다 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노동자들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서 동등한 사회적 조건에 있든가 아니면 더 나은 조건에 있든가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요. 그렇다면 더 열악한 조건에 있는, 더 나쁜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건설이라는, 돈은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이런 데서 가장 적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것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존경하는 단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하여튼 고용보험기금을 균등하게, 정말 형평에 맞게 쓴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취지를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예를 들어서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이런 제도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가지고 고용보험사업으로 약천후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사실 건설노동자들은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한 달에 10~15일 일할 때가 허다하잖아요. 약천후 수당을 신설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보험의 혜택을 보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

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실 건설일용노동자들이 동절기에 일을 못 하고 쉬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지 많이 연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조금 남겨 놓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주 질의는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실 분이 한선교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네 분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를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제종길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정위원장님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질의가 죽 있었는데 보충질의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답변을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선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교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행정지원예산 897억 중 고용보험적용징수·위탁근로복지공단 출연예산 146억 중에 10%를 삭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총 14억 6000만 원. 이 예산은 경상경비의 일종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작은 정부 또 세수 부족이라든지 경비절감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10%를 절감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불필요하게 책정된 예산이 5인 미만 징수특례제도 조기정착 홍보예산 3억 1400만 원, 일반업무비 중 근로자의 날 행사비 및 기념품·창립기념품·단체협약 이행사항·체육행사비·취미활동지원비 등 2억 2000만 원, 업무활동보조비—이것은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1급에서 6급까지 지급되는 12억 5000만 원, 조사분석비—월정직책급요. 1급에서 3급까지 지급되고 있고, 1억 2000만 원 등 총 19억, 앞에서 제가 14억 6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만 줄여도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의 월정직책급 분포를 보면 업무활동비가 있고 월정직책급이 있고 직급보조비가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

고 있는데 월정직책급의 경우를 보면 사업내용에 따라서 중복지급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월정직책급으로 1급, 2급, 3급에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40만 원, 18만 원, 5만 원. 역시 월정직책급인데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또한 신용보증계정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고 실업대책사업계정에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 네 가지 월정직책급을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또한 1, 2, 3급 또는 이사까지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은, 월 지정된 액수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건비성 급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을 그렇게……

○**한선교 위원** 기획예산처의 규정에 인건비성 급여는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린 월정직책급은 사용내역을 나중에 냅니까, 안 냅니까? 이것 인건비성 급여 입니까, 아닙니까? 하여튼 월 똑같은 액수가 나가고 있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총액임금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한선교 위원** 나누어서 주고 있다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 볼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고용보험기금이라든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의 여러 가지 계정에서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선교 위원**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요? 급여로 나가고 있는데 왜 답변할 수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지금 말씀하신 월정직책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하는 것으로 구분하면,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조직운영에 필요해서 배당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한선교 위원** 그러면 그거면 됐지요. 그거면 됐지 나머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한 사람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월정직책급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장이 쓰는 것이고……

○**한선교 위원** 그것 영수증 제출해요, 안 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안 하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로복지공단뿐 아니고 산하단체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금료체제에 대해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가지고 중복되는지……

○**한선교 위원** 이것은 환경부 모 산하단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기능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런 것만 줄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를 경상비에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은 추가해서 줄일 수 있단 말씀이지요. 또한 지금도 말씀하시기를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이것 옛날 기밀비처럼 쓰는 경우 중복되어서도……

거 좀 조용히 하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임금성인데 영수증 필요 없지 않느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그 규정이 정부투자예산지침입니다. 한 2, 3년 됐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으로는 지급할 수가 없어요. 실무자가 한번 다시 찾아보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사장님은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알고 있고 존경하는데 저도 조사하고 같이 계속해서 하시지요.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습니다.

○**한선교 위원** 정말 똑똑하시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단체의 인건비성 급여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장관님,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종길 위원** 제종길 위원입니다.

산재보상보험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는 당해연도 기금지출 총액의 100분의 8 이상을 산재예방사업비 및 안전공단 출연금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요, 장관님?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제종길 위원** 그런데 아까 산재보상보험에 대한 여러 말씀이 있으셨는데 산재예방사업은 산재율을 낮추고 산재보상급여의 지출을 줄여서 결국 산재보험료율을 낮춤으로써 산재보상보험기금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에서 산재예방사업 투자비를 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간 증가시켜 봤더니 산재보험료율이 1.45%에서 1.3%로 감소해서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록을 보신 적 있나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보지는 못했지만 예방사업을 잘한다면 산재로 인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2004년 산재예방사업비는 장관님 말씀과는 달리 2006년 대비 금액은 99억원이 증가했으나 실제 산재기금 지출 대비 점유율은 8.6%에서 8%로 오히려 0.6% 감소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세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8.6%에서 8%로 감소시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종길 위원** 누구 나와서 답변해 보시지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8%로 감소되고 있고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약 2.8%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기금 지출 총액이 11.1% 증가해서 대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점유율 자체가 떨어진 것입니다.

○**제종길 위원** 점유율이 떨어진 것은 맞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8.0%에 억지로 맞춘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만인 대 산재사망률 그리고 산재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2003년 이후에 떨어지지 않고 일정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산재예방기금을 이렇게 감소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았습시다만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산재예방사업비 중 산재예방시설 용자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제가 심의과정에서 계속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850억을 요구했는데 200억이 증액돼서 편성됐지요?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원래 용자사업이 예방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성질별로 하다 보니까 예방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따로 편성되는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제종길 위원** 현재 용자사업은 산재예방효과가 높지 않은 것이 증명되어 있으니 예방사업비 비중을 높이라고 누차 지적했고 또 금년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회예정처 검토보고에도 모두 이 같이 지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이나 안전의식 제고 교육홍보사업 등 실질적인 예방사업비는 2006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위원장, 안홍준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아까 아니라고 한 것은 그런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금액은 증액됐는데 비율로 봐서는 약간 감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법정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감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산재예방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기관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중이 매우 높아서 실제로 산재예방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산재예방사업비를 높여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여야 오히려 산재보험

의 수지를 안정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안정이 안 되고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방법은 보험료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산재를 줄여서 맞춰야 되는 것이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동부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예, 그렇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런데 몇 년째 예산은 완곡하게 늘렸지만 산재는 줄지 않는데 지금 예산까지 비중을 줄이면 산재가 줄겠느냐 이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취지를 이해하겠고 하여튼 절대 액수는 늘었지만 비율로 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증액을 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종길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용자사업은 그렇게 비중을 높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건비, 일반회계 운영경비가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점도 엄밀하게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어려워서, 고용정보원을 세워 놓고 내년에 양질의 연구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제종길 위원** 이 편성에 있어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치상 안 맞아요. 정진섭 위원도 그 분야를 계속 지적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자격검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수익이 창출되는데도 왜 고용보험기금에 편성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예산소위에서 다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제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섭 위원** 아까 2823억 원이나 들여서 청사를 사들이면서 돌아오는 보증금 반환금 343억을 왜 일반회계에 전입을 못 시키느냐 거기까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어서 할게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1717억이 금년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내년에는 1466억으로 14.6%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부진한 것들은, 잘 지출이 안 되는 것들은 그다음 해에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소위에 들어가기 전까지 각 사업별로 집계 가능한 최근까지의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전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런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1717억이 금년도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에 잡혀 있지만, 작년도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까만 예산심의 때는 1006억 원밖에 안 잡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심의받은 이후에 70% 이상을 임의로 증액했다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예산심의 이후에 심지어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동장려금은 395% 증액을 했다고요.

그러면 심의를 뭐 하러 하느냐, 물론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주요 지출 항목의 범위 내에서 30%까지는 변경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바뀌버린다면 뭐 하러 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가능하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을 변경 안 하려고 하는데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은 약간 변경해서……

○**정진섭 위원** 장관님도 국회의원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이렇게 변경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구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기금은 그 정도하고요.

하도 사회적 일자리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와서 각목을 들여다봤어요. 사회적 일자리 창출문제인데 하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봤더니 신문광고에 1억 5800 얼마, TV광고에 8억 9200 얼마 이렇게 나와요. 이와 같은 사업들은 언론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노동부가 정말로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다 보도해 줘요. 그런데 신문, TV에 이렇게 광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데 실제로 이런 애로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공모하는데 지역에서 몰라 가지고 많은 NGO나 사업체에서 응모를 안기 때문에 양질의 공모가 안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알려

서……

○**정진섭 위원** 광고보다 보도를 사람들이 더 많이 보고, 더 잘 아는 것이고 그 보도를 보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으려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이게 장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것밖에 더 되겠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말로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고 또 언론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보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계가 있어서 우리 스스로 돈을 내 가지고 홍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 때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요.

근거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몇 년 동안 각 부처가 해 오던 일이고 지금 예산심의 전에 법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해외에 뭘 더 조사하러 가는데 6000만 원 이상을 쓰십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사회적 일자리와 관계됐습니까?

○**정진섭 위원** 예.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업형으로 바꿔 주기 위해서 중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민간시장하고 연계시켜 주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오히려 있으면 있어야지 해외 나가서, 어디를 가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미국, 영국, 일본이네요. 거기 가서 뭘 더 조사해 오겠다는 것입니까? 뭐가 더 부족합니까? 조금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단순한 질의이기는 합니까만 이것이 4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쪼개서 3월까지와 9월까지 2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러면 만약 금년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하게 되면 내년 3월까지의 금년도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됩니다.

○**정진섭 위원** 이론적으로 따지면 예산 없이 지출원인행위를 하신 게 돼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물론 그것은 관행적으로 해결하는 문제이지만 회계연도 원칙에 따르면 그렇게

편성하는 것도 이상한 얘데요.

그다음에 기업연계형을 아까 7개 선정하셨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5개의 큰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현대자동차라든가 SK라든가 들어가 있는데—우리가 예컨대 10억을 거기에 지원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얼마나 더 부담을 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려야 했는데, SK 관련해서 누가 예를 들어서 말씀해 봐요.

○**정진섭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몇 배나 되지요?

○**노동부정책홍보관리본부장 노민기**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진섭 위원** 어떻게 우리보다 숫자를 더 못 외우세요? 3.5배인가 그렇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SK가 40억 내고……

○**정진섭 위원** 우리가 10억 얼마지요. 그러니까 3.5배 정도 된다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뭘 그렇게 시간을 끌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정확하게 얘기 안 드리면 실례가 될 것 같아서……

○**정진섭 위원** 기업연계형을 계속 확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들어와서 하는지 어떤지는 제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한편으로 부담을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기업이 사회공헌에 이바지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겠다 해서 스스로……

○**정진섭 위원** 지금까지는 그게 선의로 됐다고 이해를 하자고요. 그런데 계속 확대해 나가시다 보면 ‘이것을 우리만 안 하니까 이상하다’ 해서 들어오면서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면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활후견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지요? 구조가 여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70만 얼마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결식아동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업들을 하는데 그 사업을 일반 민간기업,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이 아닌 기업도 똑같은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기업하고 경쟁을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돼요. 그렇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다른 쪽보다는 더 많은 이익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발전해 나가면 사회적기업으로……

○**정진섭 위원** 축적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이 되라 그런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외국에는 그렇게 해서……

○**정진섭 위원** 외국 말고요. 보건복지부가 이미 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 때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별로 못 봤어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한번 해 내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다시 말하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지원으로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타 부처가 하는 공모사업을 왜 노동부 예산에 잡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이번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함께 논의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정진섭 위원** 아니, 지금 고용보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2700만 원밖에 못 따오시면서 이런 것은 예산에 같이 잡아서 액수를 늘려 놓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고용심의회를 통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하여튼 소위에서 각목별로 하나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병호 위원**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장학사업이라든가 보육시설 운영, 체불 생계비 지원, 신용보증 지원사업 등 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20.9% 약 633억 정도가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사정책국장 송봉근입니다.

원래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복권수입으로서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되면서 IBRD에서 차관했던 것, 그다음에 고용안정채권에서 차입했던 것을 지금 상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복권사업기금을 기본자금으로 해 가지고 취약근로자 보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노동부에서는 2차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국제개발은행의 차관이라든가 고용안정채권에서 차입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환해야 되고 또 복권수익금 배분금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2차 기본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사업은 전개하려고 하는데 재원 조성은 불안정한 상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복권수익금으로 취약근로자를 보호했던 배경을 죽 찾아보니까 당시에는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험체계가 현재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조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계해 가지고, 각종 시스템을 연계해서 제2차 복지기본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IBRD 차관이라든가 채권으로 차입했던 부분은 IMF 당시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상환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단병호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재원조달방안을 가지고는 상당히 불안정함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기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현재 복권수익금 배분금을 상향 조정해 가지고 더 들어오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7조에 보면 국가의 의무가 있는데 “국가는 이 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은 국가가 어떤 형

태로든 감액을 막고 도리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꾸 확대되는 쪽으로 해야 되거든요.

○**노동부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노동부로서는 금년에도 일반회계로 했는데 잘 반영 안 되었고 현재 복권수익금의 6.195%를 정기적으로 배분받고 있는데 다만 로또자금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기금도 불안정한……

○**단병호 위원** 그러니까 연동되어서 여기도 불안정하다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수익금 배분금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 또 로또복권 같은 그런 기금의 불안정성을 고려해서 일반회계에서 더 가져오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취약계층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진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안문제인데 어제 김성중 차관이 특수고용직노동자와 관련해서 곧바로 입법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언론보도에 보니까 노동법학자 7명으로 구성된 특고노동자, 특고종사자보호법 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말에 노동부안을 확정해서 입법절차를 밟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단병호 위원**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특고종사자보호법안 기초위원회 구성현황이라든가 이후의 추진일정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별도로 단병호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겠고 어제 저희들이 특고에 대해서 대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어제 나온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부안을 만든 다음에 정부안을 놓고 다시 한번 공청회 형식으로 또 각 단체의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12월 말까지는 결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미루어 왔는데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반드시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병호 위원** 하여튼 이후에 좀 구체적인 것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홍준** 이제 보충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한선교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교 위원**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획예산처의 지침을 봤습니다. 이것은 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별차이는 없습니다.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급여성 경비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이외의 비목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예산총칙에 명시한다.’ 이것은 2004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시행하는, 여기에 보면 인건비 편법 운영 근절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수당 신설 억제, 구조단순화 등을 통해 인건비의 투명성 강화, 또 포상금 예산 성과급 등 성과급 쪽 예산을 인건비 보전이나, 이것 잘 들어 주십시오, 일정 연도 이상 근무자에 일괄 지급하는 편법 집행 관행 폐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정직책급이라는 것은 2004년도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 ‘일정 연도 이상 근무자에 일괄 지급하는 편법 집행 관행 폐지’ 여기에서 지금 ‘이사 1·2·3급, 일정 연도 이상’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은 과거 기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인건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에도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선교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질의하면 나중에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예,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하십시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투자기관 편성지침입니다. 저희 공단과 같은 출연기관에 대한 편성지침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선교 위원** 이것은 공공기관 경영혁신 지침

이예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빠져 나가려고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한선교 위원** 예전에 훌륭한 일도 많이 하신 선배님께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복 지급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공단은 다른 공단하고 특수성이 있는 것이 3500명의 인원이 전부 갈라져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중복 지급에 대한 것은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라든지 인원이 전부 갈라져 있어서 각 기금에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라든지 월정 직책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사람에게 중복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되는 인원들에게 각각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복이 아닙니다.

○**한선교 위원** 분명히 중복이 아니시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자료도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족들 생각보다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가족들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감히 임금을 변칙적으로 해서 중복 지급을 하겠습니까?

○**한선교 위원** 변칙과 관행의 사이에서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한 자도 어겨서는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사장님, 보세요.

일정 연도 이상 근무자에게 일괄 지급하는 편법 집행 관행을 폐지하자고 지침이 내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한선교 위원** 아니, 아까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이것 인건비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그렇습니다. 인건비입니다.

○**한선교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건비는!

후생복지 이외에는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넣어야지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직책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노동부장관 이상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알았으니까요.

○**한선교 위원** 이것을 없애자는 것이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지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의……

○**한선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없애라는 것이 기획예산처에서 했던 경영혁신이에요. 본부만 해도 절대로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산하단체에 이런 일들이…… 제가 환경부도 지적을 했고요, 우리 노동부에도 있어요. 이것은 이 나라 경영혁신을 위해서 내린 것이니까 너무 부정하지 말고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본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이것은 검토 보고뿐이 아니고요, 이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투명한 사회에서 어떻게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는, 사용 내역도 제출하지 않는 급여성, 그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저희들이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교 위원** 꼭 참고하세요. 이런 혁신회의를 괜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흥준** 한선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일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도 위원** 추가가 아니고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말이지요, 지금 우리나라에 4대 보험 있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이 4대 보험 중에 2개를 노동부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렇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런데 이 4대 보험의 정부 지원액이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험에 대한 지원액하고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보험에 대한 지원액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말씀하십시오.

○**배일도 위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근로자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로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2007년도 재정지원 총액이 4조 470억 원입니다.

정부가 4대 보험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4조 470억이요, 이 중에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액은 3조 8851억으로 거의 다 건강보험에 지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1370억 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산재보험은 147억, 그다음에 고용보험은 102억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 보면 건강보험이 약 96%,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3.4%, 산재보험은 0.4%, 고용보험은 0.3%입니다.

(안흥준 간사, 홍준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이게 뭘 얘기냐 하면은요, 국가가 해야 될 공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4대 보험을 하는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담당할 역할을 재정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지원하는데 왜 산재보험하고 고용보험은 지원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잘 모르겠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보험의 성격과 보험기금의 건전성 같은 것이 작용해 가지고 그런 지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일도 위원** 그러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제일 많이 지원하는데요, 적자를 내면 낼수록 지원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보험도 한번 적자 와장창 내 버리지 그래요. 이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노동부가 복지부한테 밀린다는 소리도 들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정부로부터 지

원받아야 될 관리비, 인건비, 운영비, 이런 부분을 오히려 보험기금에서 써 버린다니까요.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관님이 이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이제 눈 가리고 아웅 그만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4대 보험 중에서 제일 취약한 사람들, 근로자들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생긴 보험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낸 돈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는 정부가 일정한 비례에 의해서 사회보험의 성격에 맞게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법 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일도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배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섭 위원!

○정진섭 위원 제가 아까 잠깐 자리를 비워서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장관께서 우리 이용섭 장관하고 협약서 맺은 것에 관해서 비용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된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MOU는 그러니까 노동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은 전적으로 맡고 일반교육은 파견 나가서 강의하게 될 텐데 주로 저희들이 강사 수를 늘려야 되고……

○정진섭 위원 일만 따오시고 돈은 안 따오셨다 그 말씀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11월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미처 예산에 계상을 못 해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켜 주시면……

○정진섭 위원 우리가 증액을 시켜 드리면 받아들여주시겠습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그리고 증액하는 만큼 다른 항목에서 깎는 것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제가 기획예산처에 그런 사정을 얘기하니까 하여튼 환노위에서 증액해서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깎지 마시고 그대로 증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하나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것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하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파독광부기념관 문제가 기금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을 갖고서 의미 있는 사업을 해 보자 말씀드렸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동부장관 이상수 그 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했는데 우선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을 보태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현재 서독에 있는 대사관에도 얘기해 가지고 그쪽에 큰 단체가 2개 있기 때문에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뭔가 의미 있는 사업을 단체에서 해 주면 우리가 일정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섭 위원 그 진행 상황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예.

○정진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파독광부기념관 문제는 통외통위 소관 아닙니까?

○노동부장관 이상수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가 지금 문제로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그 돈을 보내 주고……

○위원장 홍준표 그런데 현지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해 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노동부장관 이상수 크게 두 단체가 있고 캐나다에 또 일부가 있어서 정말 우리는 믿을 만한 단체가 생기면 사실 다 주고 싶은 기분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이제 조성준 노사정위원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항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노사정위원회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기능도 제대로 발휘 못하니 예산을 줄 필요 있겠느냐 그제 질의 요지입니다.

○노사정위원장 조성준 노사정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국감 때 저의 일신상 사정으로 국감에 참석지 못한 점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오전 질의를 통해서 존경하는 한선교 위

원님께서 노사정위원회의 무용론 내지 폐지론과 함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죽이나 그간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답답했으면 이런 지적 말씀이 있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겸허하게 자기성찰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노사정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지난 98년 2월 외환금융위기의 국난을 맞아서 당시 대통령당선자의 지시로 구성되어 가지고 단기간 내에 100개 항에 가까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해서 국난 극복의 초석을 닦은 것으로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55개 항 채택을 비롯해서 최근에 어렵사리 로드맵 합의에 이르기까지 불과 8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정적 자기 기능 수행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우리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 다양하게 분화·발전한 각계각층의 욕구 분출이 사회적 갈등으로 자리 잡아서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공동선의 입장에서 각기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해 가는 사회적 대화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존경하는 한선교 위원님의 폐지론 관련 지적은 현행 노사정위원회의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극적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저희도 받아들이고 저희 위원회도 현행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직시하고, 예를 들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과연 확보되어 있느냐는 문제, 노동계의 불참에 따른 파행의 문제, 노사 일방 거부 시 의견 집약이 어려운 문제, 그다음에 노동정책 문제 이외에 경제·사회적 갈등에 의제로 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도 직시하고 이 제도의 한 단계 더 높은 보완 발전을 위해서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발전 방향의 모색 정립에 적극 노력할 내부 방침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노사정 대화기구인 현재 국제노사정기구연합이 결성되어서 현재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가입,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서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음도 말씀드리면서, 특히 가운데 한국의 모델과 경험을 참고하여 배우

고자 금년만 해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몽골 등의 노사정기구 대표들이 방한한 바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곁들여 드리면서, 부디 저희 노사정위원회를 보다 애정 어린 눈길로 봐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한선교 위원님께서 지역노사정협의회 71개 설치 지역 중에 회의를 개최한 곳이 37개소에 지나지 않는데 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근거는 노사정위법에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치·운영하는 자율적 기구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지방화 시대에 맞춰서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2005년부터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운영방법 미숙 등의 이유로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개 가능한 지역의 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노사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전국적으로 장기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지원은 지원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공모한 후에 노사단체, 정부 공익위원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에서 심사해서 선정,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광역 5곳, 기초 2곳에 각기 5000~6000만원씩 지원하고 사후관리와 평가제도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지역노사정위원회의 지원 발전을 통해서 지역의 고용훈련, 복지, 노사분쟁 등의 문제를 중앙정부 중심보다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역 차원에서 점차 안고 해결해 갈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실질적 대화 체제를 통해 이러한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수범 모델 개발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간곡하게 당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오전 질의에 관해서 저희 위원회 말씀을 마칩니다.

○위원장 **홍준표** 조성준 위원장님, 열심히 할 테니까 예산 달라 그거겠지요?

○노사정위원장 **조성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준표**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압니다.

○**단병호 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홍준표** 서면으로 하면 안 돼요? 생방송으로 하려고요?

○**단병호 위원** 예.

○**위원장 홍준표** 하십시오.

○**단병호 위원** 노사정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노사정위원회가 그동안 한 역할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죽 얘기하신 것은 긍정적인 측면만 얘기하시고 그동안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았는데 그런 면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는 않겠고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11 노사정 합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직후에 이것이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이냐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사항이냐고 확인을 하니까 노사정 위원회에서 ‘그것은 노사정위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 노사정대표자회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극구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공문도 저희들한테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때는 그게 노사정위원회의 상당한 성과로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사항이 노사정위원회냐 노사정대표자회의냐라고 했을 때 우리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해 놓고 여기 와서는 노사정위원회 성과로 얘기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이율배반 아닙니까?

○**노사정위원장 조성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9·11 합의사항은 노사정위원회 공식회의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6자의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이루어진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드맵 관련한 필 만한 논의를 실질적으로 노사정위원회 안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그동안 수십 차례 진행해 온 바가 있었고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9·11 합의가 되었든간에 노사정위원회가 뒷받침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준표** 단병호 위원님,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그대로 이야기하고 답변도 그대로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단병호 위원** 위원장님 탄압 때문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준표** 결국 노사정위원장 주장은 끝이 매끄럽지 않았지만 그 사이 고생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줍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동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종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노동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정진섭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 신상진 위원님, 배일도 위원님 등으로부터 서면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해서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까지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 주신 제종길 위원님, 조성래 위원님, 안홍준 위원님, 정진섭 위원님, 한선교 위원님, 단병호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부 소관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종률	단병호	맹형규	배일도
신상진	안홍준	우원식	정진섭
제종길	조성래	한선교	홍준표

○**청가 위원(2인)**

이강래 이경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성곤	성곤	속·신중식·김낙성·주승용·최철국·정철래·이낙연·이인제·윤호중·변재일·안민석·유승희·양승조·김명자·최인기·문학진·김형주·우제창·강기정·이근식·염동연 의원 발의)
전문위원	윤진훈	진훈	
○정부측 참석자			
노동부장관	이상수	상수	
차관	김성중	성중	
정책홍보관리본부			
본부장	노민기	민기	
홍보관리관	장의성	의성	
재정기획관	이우룡	우룡	
고용정책본부			
고용정책심의관	김현수	현수	
노동보험심의관	조정호	정호	
직업능력개발심의관	신영철	영철	
고용평등심의관	김태홍	태홍	
노사정책국장	송봉근	봉근	
근로기준국장	하갑래	갑래	
산업안전보건국장	김동남	동남	
감사관	이기권	기권	
총무과장	박화진	화진	
중앙노동위원장	김유성	유성	
노사정위원장	조성준	성준	
서울지방노동청장	엄현택	현택	
경인지방노동청장	박종철	종철	

○기타 참석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	용석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용달	용달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	길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박은수	은수	
한국노동교육원장	선한승	한승	
산재관리의료원이사장	최병훈	병훈	
학교법인폴리텍대학이사장	박용웅	용웅	
한국고용정보원장	권재철	재철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무처장	김기영	기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

(2006. 10. 9 정부 제출)

10월 11일 회부됨

産業災害補償保險法 일부개정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1 장복심·김동철·노현송·김영춘·김재홍·박상돈·백원우·심재덕·한광원·김혁규·박찬석·이시중·우윤근·장향

公認勞務士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2 배일도·진영·이재오·박계동·안명옥·이경제·신상진·서병수·단병호·정형근·차명진 의원 발의)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2 배일도·진영·이재오·박계동·안명옥·이경제·신상진·서병수·단병호·정형근·차명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10월 16일 회부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일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6 배일도·김재윤·민병두·박상돈·장영달·강기정·배기선·김영주·맹형규·정두연·제종길·우원식·우윤근·유인태·김태홍·이은영·선병렬·송영길 의원 발의)

10월 17일 회부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경필 의원 대표발의)

(2006. 10. 20 남경필·엄호성·임해규·신상진·이인기·이운성·심재철·맹형규·김양수·김명주·정병국·차명진 의원 발의)

10월 23일 회부됨

물관리 기본법안

(2006. 10. 27 정부 제출)

10월 3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

(2006. 10. 31 김형주·강기정·김영주·김재홍·김종률·김태년·김희정·문학진·박기춘·박명광·서갑원·안병엽·염동연·우원식·우제창·유기홍·이광철·이성권·이원영·이인영·장복심·정동채·정성호·조정식 의원 발의)

11월 1일 회부됨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中改正法律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7월12일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
심상정·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
현애자·김태홍·강창일·이원영·문병호·
박계동·임종인 의원 발의)

11월 6일 회부됨

廢棄物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이명규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6 이명규·공성진·권경석·김영
숙·박재완·신상진·이성권·이인기·이재
웅·이해봉 의원 발의)

11월 7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勤勞者參與및協力增進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
안

(이상 3건 2006. 11. 7 정부 제출)

이상 3건 11월 8일 회부됨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이경재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8 이경재·신상진·김형주·이해
봉·신중식·배일도·안홍준·한선교·맹형
규·정진섭 의원 발의)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맹형규 의원 대표발의)

(2006. 11. 8 맹형규·박상돈·배기선·곽성
문·배일도·이원복·안택수·정두언·정진
섭·이경재·유재건·신상진·정동채·남경
필·이성구 의원 발의)

이상 2건 11월 9일 회부됨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단
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
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勞動委員會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
표발의)

(2006. 11. 9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
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建設勤勞者の雇傭改善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
률안(단병호 의원 대표발의)

(2006. 11. 9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
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배일도·신상진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13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

(2006. 11. 9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
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
자·임종인 의원 발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안

(2006. 11. 10 정부 제출)

環境改善特別會計法 일부개정법률안(단병호 의
원 대표발의)

(2006. 11. 10 단병호·권영길·노회찬·심상
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배일
도·임종인·강기갑 의원 발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정두언 의원 대표발의)

(2005. 11. 11 정두언·김재경·이계경·임태
희·이해봉·박세환·신상진·김재원·엄호
성·안상수·정성호·최규식·박재완·고조
홍·안민석·이은영·나경원·이경재·박승
환 의원 발의)

이상 4건 11월 1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
한 법률안(장복심 의원 대표발의)

(2006. 10. 11 장복심·최인기·류근찬·신중
식·이낙연·이인제·정진석·한병도·김교
홍·신학용·강혜숙·이근식·우제창·이경
숙·장경수·정성호·최철국·주승용·이시
중·변재일·강기정·양승조·윤호중·우제
항·오영식·김형주·안민석·김우남·우윤
근·정세균·서혜석·정장선·김덕규·장향
숙·김성곤·김명자·김낙성·권선택·이석
현·김동철·염동연·박명광·문학진·홍창
선·최재성·박찬석·이상경·김혁규·전병
현·유승희·조정식·노현송·김영춘·김재
홍·박상돈·백원우·심재덕·정청래·김영
숙·한광원 의원 발의)

10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 10. 21 정부 제출)

10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시중 의
원 대표발의)

(2006. 11. 8 이시중·노영민·김진표·이상

열 · 김종률 · 민병두 · 이계진 · 김혁규 · 한광
원 · 박찬석 의원 발의)

11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